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인쇄/1998년 12월 24일

발행/1998년 12월 28일

발행처/민족통일연구원

발행인/양영식

편집인/국제관계연구실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7 · 팩시밀리 901-2543

© 민족통일연구원, 1998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한국경제서적 : 737-7498

ISBN 89-87509-52-4

4,000원

연구 보고서 98-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신 상 진

민족통일연구원

요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북한이 4자회담 본회담에 참여하게 된 이유중의 하나도 중국의 참여와 설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주도적으로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의 의도와 전략 이외에도 중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한반도정책 기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의 국제보장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검토·분석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중국의 이해와 지지를 유도할 수 있는 대중정책 방안을 강구·제시하고자 한다.

1. 중국의 한반도정책 기조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한반도정책의 양대 기조로 삼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절실히 바라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안보와 번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다는 사실이다. 한반도는 중국의 동북지역과 1,000킬로미터 이상을 접경하고 있으며, 발해만과 황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 동부연안지역과 서로 마주하고 있다. 1950년 중국이 공산정권 수립직후 산적한 대내문제에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에 중국전체 병력의 1/2 이상을 파병하였던 사실도 한반도가 중국

의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 때문이었다.

둘째, 중국이 북한에서 사회주의체제가 유지되기 바라는 것도 한반도의 현상파괴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된다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 자신의 체제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소련붕괴 이후 줄곧 북한에 대한 최대의 정치·경제적 지원국으로 남아있다.

셋째, 중국은 대내 경제발전을 위한 대외환경 조성 차원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바라고 있다. 중국은 1978년 이래 경제건설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변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다. 2만킬로미터에 이르는 긴 국경선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안보적으로 취약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주변환경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중국은 전략요충지인 한반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한반도는 중국의 정치 중심지인 베이징에서 가장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한반도가 중국에게 적대적인 국가의 영향권내에 완전 편입되는 것을 수용하기 곤란하다. 개혁·개방을 통해 서양의 국제질서관을 대폭 받아들이고 있는 현재도 중국은 한반도에 대해서는 전통적 질서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를 「脣齒關係」 또는 「兄弟之邦」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세력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며, 한반도의 우호적인 세력에 대해서 정치, 경제적 시혜를 베풀고 있다.

한·중수교 이후 중국이 남북한에 대해 균형외교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도 한반도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북한과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지속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한국과 선린우호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북한과 미, 일을 견제하고자 하고 있다. 한반도가 가지는 전략적 이익이 사라지지 않는 한, 중국은 두 개의 한국정책을 전개함으로써 남북한에 대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 할 것이다.

2. 4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중국은 4자회담의 한 당사국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으나, 4자회담 제의 초기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중국이 4자회담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이유는 첫째, 4자회담이 미국의 주도하에 제의되었고, 둘째 북한이 반대하였기 때문이었으며, 셋째 북한이 중국의 참여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96년 하반기 이후 중국은 기존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4자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설적인 역할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강릉 잠수정사건으로 남북한간 긴장이 고조된 후,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정착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됨으로써 4자회담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4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자세가 변화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중국이 4자회담을 대미관계 개선의 장으로 활용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동아시아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한반도문제에 대해 미국과 공동 보조를 취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확보하려 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당초의 태도를 바꾸어 4자회담 설명회, 예비회담 및 본회담 참석을 수용하게 되었던 점도 중국으로 하여금 4자회담 지지 입장을 공개화하도록 하는데 결정적 요인

으로 작용하였다.

4자회담 3차 본회담시까지 중국은 관련 각국이 평등하게 참여해야 하며, 합의가 어려운 문제는 덤어두고 공통점을 지향하고, 인내심을 갖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통해서 볼 때, 향후 4자회담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중국은 다음과 같은 원칙과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구상을 주도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내정불간섭 원칙을 대외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는 바, 남북한에 대해 내정간섭이나 주권침해로 비취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구상을 선불리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중국은 4자회담이 참가국의 평등한 참여에 의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발언권을 최대한 확보하려 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이 중국이 배제된 채 남북한간 또는 북·미간에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셋째,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에 중립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받으려 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유지·강화를 한반도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고 있는 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논의과정에서 균형적인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남북한 양측에게 불만의 소지를 제공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넷째, 중국은 '이전은 덤어두고 공통점을 지향한다'는 원칙아래 현실적이고 탄력적인 접근자세를 보일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에 관련국간 합의가 가능한 문제부터 논의를 추진하고, 남북한이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다섯째, 중국은 4자회담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될 것이다. 중국은 국유기업 개혁과 실업자문제 해결 등 산적한 대내문제들을 시급히 처리해야만 하기 때문에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지역에서 급격한 현상변화를 바라지 않고 있다. 또한 유일 패권국인 미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중국으로 하여금 점진적인 접근을 선호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국제보장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

중국은 현실적으로 한반도문제가 남북한간의 합의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인식하여,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주변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문제 논의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행사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의 국제보장 과정에서도 자국의 이익이 최대한으로 구현되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은 중·미에 의한 한반도 평화보장 방식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반도에서 미국과 동등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21세기 최대 경쟁자로 부상하게 될 일본을 어느정도 견제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앞으로도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논의가 계속 진행되기를 희망할 것이다. 다만, 중국은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구도 보다는 남북한과 중·미 4국이 함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구도를 더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총체적 국력으로 보나 남북한에 대한 영향력 보유 측면에서 보나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

이기 때문에, 중국은 남북한의 평화협정을 중·미가 보장하는 구도하에서는 중국 보다 미국의 의도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형성문제가 고려될 수 있다. 이는 남북한간 나아가 동북아 지역차원의 군사분쟁 예방,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군비축소 등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안보' 메카니즘이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개선하고 평화상태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지역차원의 다자 안보협력체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중국은 구속력을 가진 지역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동북아 지역차원의 다자안보협력체를 형성하자는 주장에 대해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일본과 러시아의 한반도문제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될 수 있다는 점과 미국에 의한 주도 가능성 및 궁극적으로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현단계에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방안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중국으로 하여금 동 구상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하도록 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다.

- 목 차 -

I. 서론	1
II. 중국의 한반도정책기조	4
1.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4
2.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	8
III. 4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14
1.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대한 입장	14
2. 4자회담에 대한 입장	19
3. 4자회담 전략	27
IV. 국제보장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	32
1. 한반도 평화의 국제보장에 대한 입장	32
가. 미국에 의한 보장방안	33
나. 중·미에 의한 보장방안	34
다. 주변 4국에 의한 보장방안	36
라. 유엔에 의한 보장방안	38
2.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입장	41
V.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대중정책 방향	50
1. 한·중 동반자관계 구축 강구	50
2. 남북한 주도의 평화체제 구축 지지 요청	52
3. 4자회담 틀내에서 한·중 협력 모색	55
4.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 전환 유도	57

5. 지역 다자안보협력체 형성 지지 촉구	62
VI. 결론	65
참고문헌	70

I. 서론

1991년 소련붕괴 이후 국제질서의 탈냉전 추세가 심화되고 있으나, 한반도에서는 남북한간에 긴장과 대립구도가 지속되고 있다. 미·소 냉전체제 하에서 남북한이 상이한 이념에 기초하여 독자적인 정부를 수립하여 체제경쟁을 벌여온지 반세기가 경과하고, 한국전이 종결된 지도 벌써 45년이 지났지만, 법적으로 남북한은 아직도 전쟁상태에 있다. 북한은 적화통일정책을 견지하면서 잠수정을 파견하는 등 대남 무력도발 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한국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100만명이 넘는 병력을 유지함으로써 한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더욱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150만명이 넘는 남북한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으나, 남북한간 군사대립과 긴장을 완화시켜 온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조차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1991년 한국군 대표가 유엔사측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로 임명된 후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불참을 선언하고, 정전체제 무실화를 기도해 왔다.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대표단을 일방적으로 철수하고,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라는 기구를 임의적으로 설치하였다. 또한 1953년 정전협정에 의거 판문점에 파견되어 한반도 정전체제를 관리해 왔던 중립감독위원회 공산군측(체코와 폴란드) 대표단과 군사정전위원회 중국군 대표단이 북한의 요구와 압력으로 이미 철수되었다. 이로써 남북한간의 유일한 군사문제 협의창구로 작용해 온 군사정전위원회가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고, 현재 유엔측 정전위원회 비서처와 북한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간에 비공식 접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축만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따름이다.

북한은 한반도 군사안보문제를 미국과만 논의할 수 있다면서,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북한은 남북한간에는 이미 불가침합의서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북·미간 평화협정만 체결되면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체제가 수립될 수 있다는 논리를 고수해 왔다. 즉 북한은 정전협정 사문화 전략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고조시킴으로써 미국에게 북·미 평화협정 체결 압력을 가해 왔다.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보다는 대미관계를 개선하고 한·미관계를 이간시키기 위한 의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기에 한반도 통일을 실현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우선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 당사자간의 신뢰구축과 성실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한반도 평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이 뒤따라야 한다.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서도 합의된 바와 같이, 남북한간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노력해야만 한다. 또한 정전협정 서명국으로서 남북한과 각기 군사동맹조약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중국은 북한에 대해 식량과 석유 등 막대한 전략물자를 공급함으로써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남한과도 정식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¹⁾ 한반도 평화문제 논의를 위한 4자회담

1) 1997년까지 중국의 대북한 경제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신상진,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p. 51-53 참조. 1998년에도 중국은 북한에게 막대한 식량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중 10만톤은 외부에 공개되었다. 또한 중국은 북한에게 2만

에도 정식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1996년 회담제의 이후 1년여 기간동안의 우여곡절 끝에 북한이 4자회담 본회담에 참여하게 된 이유중의 하나도 중국의 참여와 설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²⁾

앞으로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주도적으로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의 의도와 전략과 더불어 중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4자회담을 비롯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적지 않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중국측의 입장과 전략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한반도정책 기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의 국제보장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검토·분석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중국의 이해와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대중정책 방안을 강구·제시하고자 한다.

톤이 넘는 화학비료와 8만톤의 원유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었다. 『人民日報』, 1998. 10. 15; CCTV, 1998. 4. 13; 1998. 9. 20.

2) 4자회담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 북한은 협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997년 10월 28일 천지엔(陳健) 중국 외교부장 조리의 방북은 4자회담에 관한 양국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人民日報』, 1997. 10. 29.

II. 중국의 한반도정책 기초

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전략구상을 갖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기본 정책자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한반도 평화·안보와 관련한 중국의 한반도정책 기초를 분석하기로 한다.

1.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안보와 번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다. 한반도는 라오닝성(遼寧省)과 지린성(吉林省) 등 중국의 동북지역과 1,000킬로미터 이상을 접경하고 있으며, 발해만과 황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 동부연안지역과 서로 마주하고 있다. 1950년 중국이 공산정권 수립직후 산적한 대내문제에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에 중국전체 병력의 1/2 이상을 파병하였던 사실도 한반도가 중국의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 때문이었다.³⁾

특히 중국의 정치 중심지 베이징과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있는 중국 동북삼성지역은 중국의 안보에 극히 중요한 전략 요충지이다. 중국 동북삼성지역에는 약 200만명의 조선족들이 집거하고 있는데, 한

3) 한국전 당시 중국은 연인원 230만명의 병력을 한반도에 파병하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John K. Fairbank, 「新中國史」, 중국사연구회 역 (서울: 까치글방, 1994), p. 448. 周恩來는 중국이 한국전에 많은 병력을 파병한 이유를 한반도가 미군의 중국대륙 침략을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술회한 바 있다. 周恩來, “抗美援朝, 保衛和平,” 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 編, 「周恩來選集」, 下卷 (北京: 人民出版社, 1980), pp. 52-53.

반도에서 심각한 사태가 전개된다면 이들이 동요하게 될 수 있다. 한반도 급변사태시 북한주민들이 대거 중국 대륙으로 유입될 수 있고, 이들은 곧바로 중국사회에 심각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⁴⁾ 선양(瀋陽)과 안산(鞍山) 등 중국 동북삼성지역의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 수많은 정리해고자(下崗)가 발생하여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데,⁵⁾ 대규모 북한난민의 중국유입은 중국의 안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아가 중국내 조선족들은 중국의 55개 소수민족중 몽고족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조국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이들은 현재 중국 공민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반도에서 군사적으로 강력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통일한국이 등장하게 된다면 중국 보다는 통일한국에 귀속감을 갖게 될 수 있다. 동북삼성지역 조선족들의 민족의식 회복은 중국내 타지역의 소수민족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의 명구(蒙古)족과 신장(新疆)과 시장(西藏)자치구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운동을 자극하여 중국의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중국내 조선족 사회를 동요하게 할 정도로 한반도에서 현상이 파괴되거나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1998년 3월 9기 전인대에서 중국이 조선족 출신인 리더주(李德洙)

4) 張建華 主編, 「中國面臨的緊要問題」(北京: 經濟日報出版社, 1998), pp.107-108.

5) 1997년까지 중국에서는 국유기업 개혁 결과 1천만명 가량의 정리해고자가 발생하였고, 1998년에도 3백만명 정도에 이르는 정리해고자가 추가로 발생하게 될 전망이다. 이로써 현재 중국의 실업율이 3.5%에 육박하여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張興杰 主編, 「跨世紀的憂患: 影響中國穩定發展的主要社會問題」(蘭州: 蘭州大學出版社, 1998), pp. 172-213; 陳新, 「內地面對失業問題考驗」, 「文匯報」(香港), 1998. 2. 20; 楊宜勇, 「失業問題: 冷靜思考沈着應對」, 「瞭望」, 1998年 第1期 (1998. 1), pp. 16-17.

를 소수민족문제 전담부서인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주임에 전격 발탁한 것도 향후 조선족 사회의 동향이 중국사회의 안정에 미칠 수 있는 비중을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998년 8월 한국이 「재외국민특례법안」을 제정하여 중국내 조선족 등 해외거주 한민족에게 재외국민 등록증을 발급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중국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정부에게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던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이 북한에서 사회주의체제가 유지되기 바라는 것도 한반도의 현상파괴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 동독이 서독에 의해 흡수통일된 이후 소련이 붕괴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고려할 때, 중국의 지도자들은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된다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 자신의 체제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계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즉, 동유럽과 소련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붕괴된 이래 중국은 북한을 중국 자신의 체제안보에 대한 완충지대로 간주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소련붕괴 이후 줄곧 북한에 대한 최대의 정치·경제적 지원국으로 남아있다.

중국은 대내 경제발전을 위한 대외환경 조성 차원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바라고 있다. 중국은 1978년 이래 경제건설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변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다. 2만킬로미터에 이르는 긴 국경선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안보적으로 취약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주변환경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중국은 충분한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자원과 국력을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서는 신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기가 불가능하다. 즉, 한반도를 포함한 중국의 주변지역에서 안정과 평화상태가 유지되어야만 중국이 경제발전에 전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경제발전에 유리한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주변환경 조성을 핵심 대외 정책 과제로 삼고 있다.⁶⁾

이와 같이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한반도정책의 최우선 정책기조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1993년 이래 북한 핵문제가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었을 때, 중국은 무력수단 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정책을 포기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될 경우 한국, 일본 및 대만에게 핵무기 개발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 심각한 불안정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북한의 핵무기 개발정책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국제적 압력과 무력수단을 통한 북한 핵무기 개발 지지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도록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였다.⁷⁾ 이와 같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일관적인 정책자세는 북한과 한·미의 강경 입장을 완화시켜 1994년 10월 북·미간 제네바 핵기본합의를 유도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 보다는 현상유지를 바라고 있는데,⁸⁾ 이 점도 역시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6) 鄧小平, 「目前的形勢和任務」, 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 編, 「鄧小平文選」(一九七五 — 一九八三年) (北京: 人民出版社, 1983), pp. 204-205. 또한 중국은 1993년 7월 「중국의 국방」, 제하의 국방백서를 공표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아태지역 안보전략의 3대 목표가 ① 중국의 안정과 번영, ②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 ③ 아태국가들과 대화와 협력 진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人民日報」, 1993. 7. 28.

7) 「人民日報」, 1993. 6. 13; 「錢其琛談中韓日關係」, 「文匯報」(香港), 1993. 5. 25; 「文匯報」(香港), 1993. 5. 23.

8)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신상진, 「중국: 조선족 친한화, 한·중 영토분쟁우려 한반도 현상유지 희망」, 「헌정」, 제 163호 (1995. 12), pp. 132-133 참조.

중국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당분간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이 독일의 경우처럼 흡수통일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달갑게 보지 않는다. 비록 중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적 요소를 대거 도입하여 북한과 상이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⁹⁾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게 되면 난민유입 가능성과 중·미 군사력의 직접 대치 가능성 등으로 중국의 체제 안정에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

중국은 300백만명의 병력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군사 강대국이며,¹⁰⁾ 개혁·개방정책 성공으로 경제력이 급속하게 증대되고 있는 나라이다. 중국의 국민총생산 규모가 세계 7대국으로 증가하였으며, 교역규모는 3,200억 달러를 상회하여 세계 10대국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중국은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많은 1,400억달러를 넘는 외화를 보유하고 아시아 전역에 확산되고 있는 외환위기에서 비켜서 있다. 아울러 중국은 아시아의 유일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

9) 중국은 1987년 이래 「중국식 사회주의」를 주창하면서 경제적으로 사회주의적 요소를 거의 대부분 포기한 상태이다. 특히 1998년 7월부터는 도시지역에서 사회주의적 주택분배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경제적 주택정책을 도입하였다. 「중국식 사회주의」의 개념에 대해서는 趙德水 主編, 「社會主義知識辭典」(南京: 江蘇人民出版社, 1992), pp. 92-93 참조.

10) 1997년 9월 15차 당대회에서 장쩌민 주석은 2000년까지 중국의 병력규모를 2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병력의 규모보다도 병력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군사정책을 전환한다는 대원칙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江澤民, “高舉鄧小平理論偉大旗幟, 把建設有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全面推向二十一世紀在中國共產黨第十五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人民日報」, 1997. 9. 22.

제정치 무대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발전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여 현재 주변 정세의 안정과 평화를 중시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력이 증대됨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개방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도 대내 경제발전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있다. 덩샤오핑(鄧小平)은 1980년 당중앙 간부회의시 행한 연설에서 4개현대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되면 대만의 통일과 반패권주의 투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¹¹⁾ 이는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의 최종 목표를 대내 경제발전을 토대로 국가통일 실현과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증대하려는데 두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한반도는 19세기부터 일본이 중국대륙을 침략하는데 징검다리로서 이용되는 등 중국의 안보와 번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요충으로 작용해 왔다. 중국은 1895년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일본 제국주의와 벌인 甲午戰爭에서 패배함으로써 대만과 랴오둥(遼東)반도 지역을 일본에 할양하는 치욕을 겪었으며, 이후 일본은 한반도를 발판으로 하여 1931년 만주에 괴뢰정권을 수립하여 통치하는 한편, 1937년부터는 전중국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해 대중 전면전을 선포하였다.¹²⁾

또한 1950년 한국전이 발발하였을 때에도 중국은 미군이 한반도

11) 鄧小平, “目前的形勢和任務,” p. 204.

12) 1931년 만주국 설립이후 중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는 王希亮, 「日本對中國東北的政治統治, 1931-1945」(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1991) 참조.

38도선을 경유하여 중국대륙으로까지 진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여 한국전에 방대한 규모의 인민해방군을 파병하였던 것이다. 한국전 당시 조우언라이(周恩來) 중국 국무원 총리는 미군이 중국의 국경지대까지 진격하여 중국의 안보에 위협을 미쳤기 때문에 중국 인민해방군의 한국전 참전이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우언라이는 미국이 과거 일본 제국주의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한 후 중국 동북지역에 대해 침략전쟁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파병을 정당화하였다.¹³⁾

이와 같이 한반도는 19세기말 이후 해양세력의 중국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되어 왔다. 1840년 이래 중국은 해양세력으로부터 7차에 걸쳐 군사공격을 당하였는데,¹⁴⁾ 이중 두차례는 한반도를 경유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한반도가 중국의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한반도는 중국의 정치 중심지인 베이징에서 가장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한반도가 중국에게 적대적인 국가의 영향권내에 완전 편입되는 것을 수용하기 곤란하다. 개혁·개방을 통해 서양의 국제질서관을 대폭 받아들이고 있는 현재도 중국은 한반도에 대해서는 전통적 질서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를 「脣齒關係」 또는 「兄弟之邦」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중국은 한반도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세력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며, 한반도의 우호적인 세력에 대해

13) 周恩來, “抗美援朝, 保衛和平,” 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編, 「周恩來選集」, 下卷(北京: 人民出版社, 1980), pp. 52-53. 한반도가 해양세력의 對중국 침략에 징검다리로서 사용되어 왔다는 중국인의 시각은 張建華 主編, 「中國面臨的緊要問題」(北京: 經濟日報出版社, 1998), pp. 104-106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14) Ji Guoxing, “China Versus South China Sea Security,” *Security Dialogue*, Vol. 29, No. 1 (March 1998), p. 102.

서 정치·경제적 시혜를 베풀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은 북·일 수교 교섭 및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1992년 8월 중국이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서두르게 된 이유중의 하나는 일본이 대북한 수교교섭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1991년 1월부터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중국 동북부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경제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북한과 수교교섭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대북 접근정책은 중국의 전략가들에게 경계심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했다. 당시 일본 국내에서는 걸프전에서 막대한 전비를 분담하고서도 이에 상응하는 정치·군사적 역할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배경하에서 일본정부는 북한과 수교교섭을 전개하고 캄보디아에 유엔평화유지군을 파견함으로써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정치대국화를 지향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일본의 대북 수교교섭 진전에 따른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조기에 마무리 하였던 것이다.¹⁵⁾

또한 1994년 10월 제네바에서 북·미간 기본합의문이 체결되었는 바, 이를 계기로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미국은 국제사회에 「중국위협론」을 제기함으로써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 하였고, 1994년 9월에는 對대만 관계격상 정책을 채택하였다.¹⁶⁾ 이로써 중·미간에는 대립과 긴장국면이 지속되었다. 이러

15)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신상진, 「중·북관계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p. 8-10; 杜攻 主編, 「轉換中的世界格局」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2), pp. 314-323 참조.

16) 1994년 9월 미국은 대만관리의 미국방문을 용이하게 하고, 미국주재 대만대표부의 공식 명칭을 「北美事務協調委員會」에서 「駐美 臺北經濟文化代表處」로 변경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한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의 대북관계 개선정책을 중국전제 의도를 지닌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중국은 북·미간 제네바 합의 이후 최고지도자들의 한국방문을 통해 한국과의 정치·외교관계 증진을 모색하였다. 1994년 10월말 리펑(李鵬)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고, 1995년에는 중국 공산당내 서열 1위와 3위인 장쩌민(江澤民) 주석과 차오스(喬石)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한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중국이 한국과의 정치·외교관계 개선을 적극 모색하였던 것은 북·미관계 개선에 따른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중수교 이후 중국이 남북한에 대해 균형외교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도 한반도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북한과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지속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한국과 선린우호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북한과 미, 일을 견제하고자 하고 있다.¹⁷⁾ 한반도가 가지는 전략적 이익이 사라지지 않는 한, 중국은 두 개의 한국정책을 전개함으로써 남북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정책은 중국의 국력이 증대될수록 강화될 것이며, 중·미, 중·일관계가 경쟁과 대립구도로 전개될수록 심화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경제력 및 군사력을 더욱 증강하게 되면 중국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서 행동의 제약을 덜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중국에 대해 견제 또는 봉쇄정책을 노골화 하고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정치·군사력 증강정책

17) 1998년 「政府工作報告」에서 중국은 한반도정책 기조를 “북한과 우호관계를 지속하고, 한국과 호혜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해 노력하는데 두고 있다”고 천명하였다. “政府工作報告,” 「文匯報」(香港), 1998. 3. 6.

을 표면화하면 할수록 중국은 미·일의 전략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 끌어안기와 한국 접근정책을 적극화할것이다.

Ⅲ. 4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1996년 4월 4자회담 제의 이후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4자회담을 통해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설명회와 예비회담을 거쳐 3차에 걸친 4자회담 본회담이 개최되었다. 4자회담에서 분과위원회 설치 합의 이외에 특별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남북한과 미, 중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는 것 자체로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4자회담을 주도해 온 미국이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를 선임하는 등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¹⁸⁾ 또한 우리 정부도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논의는 원칙적으로 4자회담 틀을 계속 활용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본 장에서는 4자회담의 한 당사자인 중국의 입장과 전략을 분석·전망하기로 한다.

1.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대한 입장

제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은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에서 효력을 상실하고 있는 정전체제가 궁극적으로 평화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정전체제는 냉전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를 보장해

18) 1998년 7월 7일 미국은 4자회담 실무를 담당해 왔던 찰스 카트만(Charles Kartman)을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로 임명하였다.

주는 장치가 될 수 없다면서, 탈냉전기에 걸맞는 새로운 평화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¹⁹⁾

그러나 다른 한편, 중국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체제가 수립될 때까지 현 정전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도 동조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문제가 동아시아 지역안정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²⁰⁾ 한반도에서 '최소한의 평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데 기여해 온 정전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남북한간 참여한 갈등과 긴장이 정전기구를 통해 완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에서 정전체제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또 다른 이유는 정전체제가 유지됨으로써 중국이 한반도문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데 있다. 1953년 정전협정 서명 당사국의 일원으로서 중국은 법적으로 주변 4국 중 한반도문제에 대해 가장 큰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¹⁾ 중국은 북한의 요구로 1995년 12월 판문점 군사정전위 대표단을 철수시키면서도 한반도 평화문제 논의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환' 형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에 대해 남북한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중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중국

19)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1994년 리펑 총리의 방한시부터 외부에 공표되었다. 王松, “從兩個角度看李鵬訪韓意義,” 「文匯報」(香港), 1994. 11. 6.

20) 賀凱, “開創東亞合作新篇章—9+3, 9+1會晤及其影響,” 「現代國際關係」, 1998年 第2期 (1998. 2), p. 2; 曾虎, “東南亞不贊同中國威脅論,” 「瞭望」, 1997年 第7期 (1997. 4), p. 15.

21) 한반도 정전협정문은 북한군(김일성)과 중국군 대표(彭德懷) 그리고 한국군과 유엔군을 대표한 유엔군 사령관(Clark) 3자에 의해서 서명되었다. 한반도 정전협정 체결과 관련한 중국의 외교교섭에 대해서는 裴堅章 主編, 「中華人民共和國外交史, 1949-1956」,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4), pp. 198-210 참조.

은 한반도가 중국의 안보에 잠재적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한반도의 궁극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가 일차적으로 남북한간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평화체제 구축시까지의 정전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한국측의 주장에도 일부 공감해 왔다.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대한 이와 같은 중국의 이중적인 자세는 중국이 한반도의 안정과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한반도정책의 양대 기조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지지하지만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시까지의 현 정전체제가 유지되기를 주장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기여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당사자문제와 관련, 중국은 남북한이 일차적 당사자이며, 중국과 미국 등 주변국은 이차적 당사자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과 북한 양자간의 평화체제 전환 협상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당사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미국과 북한간 평화협정을 통하여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될 경우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는 반면, 중국의 영향력 감소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가 한국과 중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북한간에 국한되어 논의될 경우,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의 도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한 직접 당사자간의 신뢰회복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

이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이 남북한간 대화와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하며, 남북한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²²⁾

한편,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일본과 러시아가 직접 관여하는데 대해서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문제 논의과정에 일본과 러시아가 개입하게 될 경우, 중국이 행사할 수 있는 발언권이 줄어들 수 있고 참여국간 의견조정이 어렵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최근 일본의 정치·군사 역할증대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는 바,²³⁾ 일본이 한반도 평화문제 논의과정에 직접 당사국으로서 참여하는 것을 수용하기 곤란할 것이다. 1998년 2월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가 중국방문시에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6개국 공동선언」(이하 6개국 선언) 구상을 제의하였을 때에도 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을 뿐 6개국 선언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지는 않았다. 중국은 4자회담 2차 본회담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한반도문제에 대한 자국의 발언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구상을 굳이 공개적으로 지지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남북기본합의서」체제 복원과 4자회담 병행 추진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다. 중국은 선언적 차원에서는 이를 반대하지 않

22) Zhou Xingbao, "China's Perspectives and Position about the Proposed Four-Party Talks," KINU International Conference, Seoul, April 15, 1997, pp. 5-7.

23) 일본의 정치·군사 대국화에 대한 중국의 우려시각이 잘 나타나고 있는 글로서는 席來旺, 「21世紀中國戰略大策劃·外交謀略」(北京: 紅旗出版社, 1996), pp. 133-144; 賀沖, 「日本從未放棄對臺野心」, 「文匯報」(香港), 1998. 6. 7; 劉江永, 「美日重建冷戰後同盟」, 「世界知識」, 1996年 第9期 (1996. 5), pp. 2-5 등이 있다.

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1991년말 남북한이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을 당시부터 중국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이 라면서 이를 지지·환영한다는 태도를 보여왔다.²⁴⁾ 치엔치첸(錢其琛) 중국 외교담당 부총리도 9기 전인대 개최시 기자회견에서 남북 기본 합의서체제 복원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²⁵⁾ 중국은 남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체제를 통해 한반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한반도문제에 대한 미, 일 등 해양세력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유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문제가 동아시아의 주요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기본합의서」체제 복원과 4자회담 병행 추진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구상에 정면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내심으로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문제가 「남북기본합의서」 체제에 의해 주도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4자회담에 직접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가 전적으로 「남북기본합의서」 체제에 의해 추진되는데 대해 원칙적으로 달갑게 보지 않을 것이다. 물론 남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 체제에 의해 한반도 평화문제 논의의 진행을 주장할 경우, 중국은 내정불간섭 원칙하에 공개적으로는 이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24) “中國歡迎朝鮮北南高級會談取得成果,” 劉金質, 楊淮生 主編,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匯編」, 5卷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p. 2599.

25) 「人民日報」, 1998. 3. 13.

2. 4자회담에 대한 입장

1996년 4월 16일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4자회담을 제의하였다. 중국은 4자회담의 한 당사국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으나, 4자회담 제의 초기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중국이 4자회담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이유는 첫째, 4자회담이 미국의 주도하에 제의되었고,²⁶⁾ 둘째 북한이 반대하였기 때문이었으며,²⁷⁾ 셋째 북한이 중국의 참여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이었다.

1996년 3월 대만총통 선거를 전후하여 중국이 대만의 독립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대만의 지룽(基隆)과 까오슝(高雄) 인근해역에 미사일을 발사하여 긴장을 조성하고, 이에 미국이 대만해협에 항공모함 전단을 파견함으로써, 중·미관계는 1979년 12월 국교정상화 이후 가장 큰 시련에 봉착하였다.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미간의 대립과 긴장국면은 류화치유(劉華秋) 중국 국무원 外事辦公室 주임과 앤서니 레이크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간 협상채널을 통하여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 대신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을 자제한다는 입장을 확인함으로써 해소되었다.²⁸⁾ 그러나 대만해협 사건 이후 중국의 지도자들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구상을 중국경제·봉쇄 구상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4자회담 제의 다음날 미국이 일본과 ‘신안보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중국은 미국이 일본과 공동

26) 4자회담은 1996년 4월 제주도에서 한·미 정상의 공동 설명문을 통해 제의되었으나, 실지로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제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북 4자회담 제의 배경,” 『東亞日報』, 1998. 8. 25.

27) 李福興, 秦世森, “朝鮮半島問題四方會談及其影響,” 『現代國際關係』, 1998年第2期 (1998. 2), p. 10.

28) 류화치유 중국 국무원 의사관공실 주임과 앤서니 레이크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간의 협상에 대해서는 『한국일보』, 1996. 4. 17 참고.

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구상이라고 비난하였다.²⁹⁾

이와 같이 중·미관계가 대립국면으로 치닫게 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의 4자회담 제의에 대해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은 미국이 4자회담을 제의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이 북한과의 접근을 통해 북한을 「和平演變」(개방으로 유도하여 사회주의체제를 평화적으로 변화시킴) 시키는 동시에, 한반도에서 패권적 지위를 확보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데 있다고 인식하였다.³⁰⁾ 따라서 중국은 4자회담 제의 직후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일차적 당사자는 남북한이라고 주장함으로써 4자회담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우회적으로 대변하였다.³¹⁾

북한이 4자회담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것도 중국으로 하여금 4자회담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었다. 북한은 남북한간에는 이미 「기본합의서」를 통해 평화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미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또한 북한은 1994년 12월 판문점 군사정전위 중국대표단의 철수를 요구·관철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중국의 참여 여지를 저지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한국과 중국을 참여시키는 4자회담 구상을 적극 지지하기 어

29) 袁明, “21世紀初東北亞大國關係,” 「國際問題研究」, 1996年 第4期 (1996. 10), p. 21; 張大林, “日美同盟向何處去,” 「國際問題研究」, 1996年 第1期 (1996. 1), p. 26; 達君, “威脅來自威脅論鼓吹者,” 「人民日報」, 1996. 10. 19; 何亮亮, “美圖維護西太平洋霸權,” 「文匯報」(香港), 1996. 4. 28.

30) 李福興, 秦世森, “朝鮮半島問題四方會談及其影響,” pp. 10-11.

31) 4자회담 제의 직후인 1996년 4월 19일 치엔치첸 중국 외교부장은 헤이그에서 개최된 중·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4자회담 제의가 타당하다고 보지만 (한반도 평화의) 일차적인 책임은 남북한에 있다”고 언급하였다.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20-21, 1996. 또한 설펍광 중국외교부 대변인도 4자회담이 남북한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China Affirms Stand on Kore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24, 1996. 중국은 4자회담의 일차적 당사자가 남북한이라고 강조하였는 바, 그 주요 이유중의 하나는 4자회담이 미국의 주도하에 진행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려웠다. 북한은 4자회담을 대미관계 개선과 한·미로부터 경제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으며, 4자회담 구도 속에서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하는데 계속 반대했었다.

1996년 당시 미국의 동북아전략에 대중 경제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식하였던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간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은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급속하게 개선하게 되면 한반도에서 중국의 발언권이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북한에 대해 정치·경제·외교적 지원정책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이 반대하는 4자회담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표함으로써 북한과의 관계를 경색시킬 하등의 필요성을 갖지 않았던 것이다.

셋째, 북한이 중국의 4자회담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중국으로 하여금 4자회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도록 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북한은 4자회담에 중국이 참여하게 될 경우,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더 복잡하게 된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중국이 한국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는 등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정책을 전개하자 중국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³²⁾ 따라서 북한은 「3+1회담」을 제외하는 등 중국의 4자회담 참여를 반대하였다.³³⁾

32) 신상진, 「중·북관계 전망」, pp. 17-18;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로동신문」, 1994. 11. 4.

33)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한성렬 공사는 미국과 남북한이 3자회담을 개최한 후 추후에 중국이 참여하는 회담을 제외하였다. 북한은 중국을 4자회담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4자회담을 북·미회담 구도로 유도해 나가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1997. 4. 23. 또한 북한은 중국이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이기는 했지만 조인 당사자가 아니었으며, 협정을 준수·집행·유지하는 책임 당사자도 현재 협정의 효력을 받고 있는 당사자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중국군이 1958년 한반도에서 완전 철수하였으므로 한반도 무력대치의 당사자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북한은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할 당사자는 남북한과 미국이며, 남북

이와 같이 북한이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에 중국의 참여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자, 중국은 당연히 4자회담 구도를 적극 지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북한이 「3+1회담」을 제의한 직후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식과 회담의 참가 범위에 관한 관련 당사국의 의견이 일치하기 바란다”면서 사실상 북한의 제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³⁴⁾ 중국은 조석으로 태도변화를 보이는 북한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대로 간주하고 4자회담에 대해서도 관망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³⁵⁾

그러나 1996년 9월 강릉 잠수정 사건이 발생하여 남북한간 긴장이 고조되고 동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태경제협력체」(APEC) 비공식 지도자회의에서 중·미 정상간에 관계개선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1997년 북한이 4자회담 공동설명회, 예비회담 및 본회담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자, 중국도 기존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4자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강릉 잠수정사건으로 남북한간 긴장이 고조되자 한반도의 평화정착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어 4자회담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³⁶⁾ 중국은 4자회담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4자회담 예비회담과

한간에는 이미 불가침합의서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북·미간 평화협정만 체결되면 된다는 것이다. 한호석, “한(조선)반도에서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길,” <http://www.pond.com/~cra/hanz.html>

34) 「人民日報」, 1997. 4. 24.

35) 上官文天, “調停朝鮮半島危機各懷鬼胎,” 「鏡報」, 1996年 5月號 (1996. 5), p. 83.

36)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의 한반도문제 전문가와의 인터뷰, 北京, 1996. 11. 23.

본회담에 천지엔(陳健) 외교부장 조리와 탕자쉬엔(唐家璇) 외교부 부부장 등 외교부내 비중있는 인사를 대표로 파견하였다. 뉴욕 4자회담 예비회담 개최직전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한반도 정전협정 당사국이며 주변국가이므로 4자회담 참여에 동의하며, 새로운 평화보장체제 수립과정에서 건설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는 바,³⁷⁾ 이는 중국이 4자회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자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4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자세가 변화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중국이 4자회담을 대미관계 개선의 장으로 활용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1996년 11월 마닐라 「아태경제협력체」 비공식 지도자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중·미 정상회담에서 장쩌민과 클린턴은 연례 정상회담을 양국 수도에서 개최하기로 하는 등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은 대내 경제건설을 위해 세계 유일 패권국인 미국의 협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촉발된 대미 긴장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였다.³⁸⁾ 따라서 중국은 동아시아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한반도문제에 대해 미국과 공동 보조를 취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확보하려 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³⁹⁾

북한이 당초의 태도를 바꾸어 4자회담 설명회, 예비회담 및 본회

37) 「新華通信」, 1997. 7. 2. 4자회담 1차 예비회담시에도 천지엔 대표는 중국이 4자회담에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人民日報」, 1997. 8. 9.

38) 중국 국무원 국제문제연구중심의 퇴임 외교관과의 인터뷰, 北京, 1996. 11. 24.

39) 1996년 11월 마닐라 중·미 정상회담 직후, 윈스턴 로드 미국무부 아태담당 차관보는 4자회담이 성사될 경우 중국이 이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하였다는 점을 천명하였다. 이는 중·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4자회담 참여를 대미 관계개선의 지렛대로 삼으려 하였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사례로 분석된다. 「조선일보」, 1996. 11. 25.

담 참석을 수용하게 되었던 점도 중국으로 하여금 4자회담 지지 입장을 공개화하도록 하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한과 전통 우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하고자 하였던 중국은 4자회담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표하더라도 북한에게 비난의 소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중국은 1997년 3월부터 시작된 일련의 4자회담 진행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행사하였다. 4자회담 설명회가 남북한과 미국 사이에 개최되었을 때, 중국 외교부는 “4자회담 설명회가 4자회담 실현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기 바란다”면서 4자회담에 대한 지지 입장을 우호적으로 표명하였다.⁴⁰⁾ 4자회담 설명회 직전인 1997년 3월 1일 개최되었던 8기 全人大 5차회의시 발표된 「정부공작보고」에서 중국은 한반도정책의 중점을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둘 것이라고 밝혔는 바,⁴¹⁾ 이 점도 4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지지 입장을 간접적으로 대변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중국이 중시하였던 것은 한반도문제 논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는 것이었다. 따라서 중국은 4자회담 설명회 개최 이후 4자회담 예비회담과 본회담에서 주도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전력하였다. 4자회담 예비회담 직전 탕궈창(唐國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정전협정 당사국으로서 그리고 주변국가로서’ 4자회담 참여에 동의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정에서 건설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⁴²⁾ 이러한 중국 외교부의 주장은 중국이 한반도 4자회담에 주요

40) 「人民日報」, 1997. 3. 6.

41) 李鵬, “政府工作報告,” 「文匯報」(香港), 1997. 3. 16. 매년 연초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의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당해 연도 중국의 대내외 정책방향이 결정·공표된다.

42) 「人民日報」, 1997. 7. 2. 치엔치첸 중국외교부장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었던 제4차 ARF회의시 4자회담이 한반도와 아태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 「人民日報」, 1997. 7. 28.

당사국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자회담 예비회담에 대한 참가가 보장된 후 중국은 외교부내 동아시아 전문가인 천지엔 외교부장 조리(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⁴³⁾ 예비회담의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점은 4자회담 본회담의 의제 설정문제와 분과위원회 구성문제였는데, 이들 문제에 대해 중국은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예비회담에서 입지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4자회담 본회담 의제설정문제와 관련, 중국은 '모든 쟁점을 포괄할 수 있는 광범위한 단일의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를 외형상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⁴⁴⁾

또한 중국은 북한이 외교적 비대칭성을 제기하면서 주장한 북·미 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시하였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등 '벼랑끝외교'를 구사하고 있는 이유도 북한의 국제적 고립에서 기인한다면서 북한의 국제고립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중국은 북한이 국제고립에서 벗어나야만 남북관계가 정상화 되어 한반도 긴장국면이 완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이 안보 및 경제면에서 중국의 지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더라도 중국과의 전통우호관계를 전면적으로 파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인식하여, 북한의 대미관계 개선 주장을 지지하였던

43) 천지엔은 중국 외교부내 중요한 직책의 하나인 외교부 대변인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쉬둔신(徐敦信)에 이어 주일 대사로 재직하고 있다.

44) 『人民日報』, 1997. 8. 7.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와 긴장완화문제를 의제로 채택하자고 주장한 반면,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북·미관계 개선문제를 본회담 의제에 포함시켜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것이다.⁴⁵⁾

분과위원회 구성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은 남북한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적 태도를 보였다. 한국과 미국은 「평화체제구축 분과위」와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분과위」 등 2개 분과위 구성을 제의 하였으나,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문제 논의를 보장할 수 있는 분과위 구성을 제의하였다. 이와 같이 남북한의 입장이 대립함으로써 분과위 구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려웠는데, 중국은 분과위 구성에 공감하면서도 남북한의 융통성 발휘와 4자 전원의 합의에 의한 구성을 주장하였다. 중국은 남북한의 입장을 조정하는 위치에 서서 4자회담에서 발언권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4자회담 본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1997년 12월, 1998년 3월 그리고 1998년 10월 세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는데,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라는 한반도정책 기조에 입각하여 4자회담의 성공을 위해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특히 중국은 1차 본회담시 탕자쉬엔 외교부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파견하였는데, 이는 4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관심이 지대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볼 수 있다.⁴⁶⁾ 중국은 탕자쉬엔 외교부 부부장의 4자회담 참석을 1954년 조우언라이 총리의 제네바회의 참가와 비유함으로써 4자회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탕자쉬엔은 1차 본회담시 발표한 기조발언문에서 중국이 다른 참여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적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는 점을 밝힘으

45) 천지엔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4자회담 1차 예비회담에서 북·미관계 개선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人民日報」, 1997. 8. 9; 탕자쉬엔 중국 외교부 부부장도 4자회담 1차 본회담 기조연설시 남북한이 화해하고 북·미 관계가 개선되어야만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다면서 북한과 미국이 관계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文匯報」(香港), 1997. 12. 10.

46) 탕자쉬엔은 1998년 3월 9기 全人大에서 치엔치첸에 이어 외교부장으로 발탁된 중국외교부 내의 실력자이다.

로써 4자회담 지지입장을 분명히 하였다.⁴⁷⁾

3. 4자회담 전략

4자회담 3차 본회담시까지 중국은 관련 각국이 평등하게 참여해야 하며(平等相待), 합의가 어려운 문제는 덤어두고 공통점을 지향하고(求同存異), 인내심을 갖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循序漸進)고 주장해 왔다.⁴⁸⁾ 이와 관련해서 볼 때, 향후 4자회담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중국은 다음과 같은 원칙과 전략을 견지·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구상을 주도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내정불간섭 원칙을 대외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는 바, 남북한에 대해 내정간섭이나 주권침해로 비춰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구상을 선불리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4자회담에 대해서도 중국은 자국에 불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적극 참여하여 중재자 역할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중국이 4자회담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게 될 경우 중·미 관계가 소원화 할 수 있고 중국과 남북한관계가 경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을 천명하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

47) 『新華月報』, 1998年 第1期 (1998. 1. 30), pp. 117-118; 『人民日報』, 1997. 12. 10; 1997. 12. 11; 1997. 12. 12.

48) 4자회담 1차 예비회담과 4자회담 1차 본회담시 중국측 수석대표는 기조 발언문에서 이러한 원칙을 제시하였다. 周德武, “四方會談終有期,” 『人民日報』, 1997. 8. 15; 『新華月報』, 1998年 第1期 (1998. 1. 30), p. 117.

국의 대내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동북아 전체의 안정유지를 위해서도 긴요하다는 주장을 계속 피력할 것이다.⁴⁹⁾

둘째, 중국은 4자회담이 참가국의 평등한 참여에 의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발언권을 최대한 확보하려 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이 중국이 배제된 채 남북한간 또는 북·미간에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남북한간 또는 북·미간에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한반도 평화문제 논의를 위한 4자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 평화의 일차적 당사자가 남북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도 북·미간 주도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과의 수교이후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 양자 채널에 의해 한반도 문제가 해결될 경우 한반도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인식하여 북·미 주도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주변 4국중 유일하게 남북한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4자회담이 남북한 주도로 진행되더라도 가장 손해를 덜 볼 수 있다.⁵⁰⁾ 따라서 중국은 4자회담의 일차적 당사자가 남북한이라는 주장을 계속 견지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내심으로 남북한과 미국과 함께 동등한 자격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게

49) 중국의 지도자들은 미국과 러시아의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동북아지역 전체의 안정과 번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文匯報」(香港), 1998. 10. 24; 1998. 9. 12; <http://www.usembassy-china.org.cn/english/press/hot/Prfact1.html>

50) 여기에서 지칭하는 '정상적인 외교관계'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유지하면서 특기할 만한 외교현안이 대두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될 것이다.⁵¹⁾ 중국은 현 남북한간 대립구도 하에서 남북한이 한반도 평화문제에 합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남북한의 이견을 조정하는 중재자로 참여하여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 하려 할 것이다. 즉,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남북한 주도에 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북한과 미, 중 4국에 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더 바라게 될 것이다.

셋째,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에 중립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받고자 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유지·강화를 한반도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고 있는 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논의과정에서 균형적인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남북한 양측에게 불만의 소지를 제공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이미 기존의 4자회담 진행과정에서도 잘 나타난 바 있다.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문제가 4자회담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는데, 중국은 중립적인 입장을 통해 남북한으로부터 비난을 모면해 왔다.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관련, 중국은 원칙적으로 지속적인 주둔에 동의하지만, 북한이 이를 4자회담 의제로 제기할 경우 반대하기 어렵다는 이중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북·미 평화협정 체결문제와 관련, 중국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는 반대하나 북·미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지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천명하고 있다.⁵²⁾

51) 4자회담 3차 본회담에서도 중국은 기초발언문에서 각국이 '공평한 태도로' 긴밀하게 협상·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人民日報」, 1998. 10. 22.

52) 「人民日報」, 1997. 8. 9.

넷째, 중국은 求同存異(이견은 덮어두고 공통점을 지향) 원칙 아래 현실적이고 탄력적인 접근자세를 보일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에 관련국간 합의가 가능한 문제부터 논의를 추진하고, 남북한이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원칙은 이미 4자회담 예비회담과 1, 2, 3차 본회담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중국은 4자회담 개최 일정과 회담 개최 장소 및 참석자 수준 등 비교적 합의하기 쉬운 문제를 먼저 논의하고, 가장 합의하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인 회담 의제와 진행방식은 마지막으로 논의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 등 2개 분과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문제 등은 각 분과위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반도와 직접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4자회담 관련 당사국들이 균형적이고 탄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⁵³⁾

이와 같이 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자세를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는 평화체제 구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간 신뢰회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주한미군 철수 및 북·미 평화협정 체결문제 등 남북한간 참여한 이견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4자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문제 논의에 진전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⁵⁴⁾ 따라서 중국은 남북한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

53) 「人民日報」, 1998. 3. 18.

54)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의 한반도문제 전문가와의 인터뷰, 北京, 1996. 11. 23. 중국은 남북한간 긴장구도가 매우 뿌리 깊다는데 공감하고 있으며, 중

을 통해 한반도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중국이 평화지향 세력이라는 것을 과시하려 할 것이다.

다섯째, 중국은 4자회담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될 것이다. 중국은 국유기업 개혁, 실업자문제 해결, 빈부격차 해소 및 부정부패 척결 등 산적한 대내문제들을 시급히 처리해야만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지역에서 급격한 현상변화를 바라지 않고 있다. 또한 유일 패권국인 미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중국으로 하여금 점진적인 접근을 선호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이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고 중·북관계가 소원한 현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이 자국에 유리하게 진행되지 않을 여지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신중하고도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게 될 것이다.

국축 4자회담 대표로 참석하였던 치엔용니엔(錢永年) 대사는 한반도에 긴장과 대치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상호불신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人民日報」, 1998. 10. 22. 宋淑萍, 夏旭東, “面向二十一世紀的朝鮮半島形勢及南北朝鮮關係,” 薛君度, 陸忠偉 主編, 「面向二十一世紀的中國周邊形勢」, (北京: 時事出版社, 1995), p. 420.

IV. 국제보장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

한반도의 국제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는 바,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이 있는 주변국들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1991년 남북한간에 체결된 「기본합의서」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남북한간 불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한반도 평화의 국제보장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분석·전망하고자 한다.

1. 한반도 평화의 국제보장에 대한 입장

내정불간섭을 대외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는 중국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의 문제는 해당 국가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왔다.⁵⁵⁾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문제도 기본적으로는 남북한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현실적으로 한반도문제가 남북한간의 합의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주변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⁵⁶⁾ 다만, 중국은 한반도문제 논의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행사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의 국제보장 과정에

55) 중국은 평화공존 5개원칙을 대외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내정불간섭이 평화공존 5개원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Jiang Zemin, "Let Us Work Together for a Better World," *Beijing Review*, November 6-12, 1995, p. 20.

56) 중국은 미국과의 각종 고위급 회담에서 한반도의 안정유지를 위해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적으로 천명해 왔다.

서도 자국의 이익이 최대한으로 구현되기를 바라게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의 국제보장 방안으로서 ① 미국에 의한 보장방안(2+1), ② 중·미에 의한 보장방안(2+2), ③ 한반도 주변4국에 의한 보장방안(2+4), ④ 유엔에 의한 보장방안 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⁵⁷⁾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들 각 방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분석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국제보장 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중국의 태도를 전망하고자 한다.

가. 미국에 의한 보장방안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패권적 지위를 향유하고 있는 바, 한반도문제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미국은 한국과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반도에 3만 7천명에 달하는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 등 한반도 평화유지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미국은 강력한 군사·경제적 역량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아울러 북한은 「3+1」 구상(우선 남북한과 미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하고 나중에 중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의하는 등 미국과만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⁵⁸⁾ 즉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가장 잘 구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의 보장자로서 미국이 가장 유력하게 부각될 수 있다.

57) 강원식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 148.

58) 1997년 4월 북한이 「3+1」 구상을 제의한 근본 목적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과정에서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도 배제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미, 일, 중, 러 등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교차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한반도문제가 어느 한 강대국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주도될 경우 다른 주변국이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냉전종식 이후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변 강대국들이 수면하에서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확대 경쟁을 전개하고 있는 바, 특정 강대국에 의한 한반도문제 주도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미국 단독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한국과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의 평화합의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경우, 한반도는 완전히 미국의 영향력 범위내에 편입될 것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반면, 한반도에서 중국의 입지는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중국은 안보적으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남북한에 대해 균형외교를 전개함으로써 남북한과의 선린관계를 지속하는 한편, 미국에 대해서는 한반도 등 지역 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보장 노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 할 것이다.

나. 중·미에 의한 보장방안

중·미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은 한반도 정전협정의 실질적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은 북한과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고 있는 군사동맹조약을 유지하고 있고,⁵⁹⁾ 미국은 한국과 군사동맹조약에 입각하여 한반도에 많은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실적인 측면에서도 중·미가 한반도 평화의 보장자로 참여하는 것은 어느정도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한반도 평화문제를 중·미 양국에 의해서만 보장하게 될 경우 러시아와 일본으로부터 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1998년 7월 러시아가 한국 외교관을 추방하고 북한에 대해 접근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남북한과 중·미 4국만에 의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러시아를 배제하였던데 대한 불만이 누적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이 중국이 한반도 평화의 보장자로 참여하는데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2+2」방안의 실현에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다.

1996년 4월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평화문제를 4자회담 방식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공표한 후 남북한과 중·미에 의한 「2+2」방식에 의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제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은 이러한 구상에 대해 대체적으로 찬동해 왔다. 4자회담 즉 「2+2」방식에 의한 한반도 평화보장 방식은 미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중국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반대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러한 방식을 통한 한반도문제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국과 동등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21세기 최대 경쟁자로 부상하게 될 일본을 어느정도 견제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⁶⁰⁾

59) 중국과 북한은 1961년 7월 군사동맹조약(원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조약 제2조에서 “체약 쌍방은 쌍방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60) 중국의 전략가들은 일본이 21세기 중국의 최대 적대국 또는 경쟁국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席來旺, 「國際安全戰略」(北京: 紅旗出版社, 1996), pp. 50-56.

따라서 중국은 앞으로도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논의가 계속 진행되기를 희망할 것이다. 다만, 중국은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구도 보다는 남북한과 중, 미 4국이 함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구도를 더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총체적 국력으로 보나 남북한에 대한 영향력 보유 측면에서 보나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남북한의 평화협정을 중, 미가 보장하는 구도하에서는 중국 보다 미국의 의도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것이다.

다. 주변 4국에 의한 보장방안

이 방식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주요 관련 당사국 전체가 참여하는 것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한반도 평화보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향유하고 있는 일본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향후 한반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역할을 무시하기가 어렵게 되고 있다. 한·미가 금융위기와 의회의 반대 때문에 대북 경수로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에서도 한반도 평화·안정문제에 대한 일본의 재정적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됨으로써,⁶¹⁾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대내 정치·경제문제로 동북아시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지만,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 러시아의 참여를 전면 배제해서는 안된

61) 1997년 9월 미국은 동아시아에 대한 안보부담을 축소하고 일본과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지역안정을 유지한다는 방침에 입각하여 일본과 새로운 방위협력지침을 채택하였다.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전문은 「朝日新聞」, 1997. 9. 25 참조.

다. 따라서 중, 미 이외에 일본과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의 보장자로 참여하게 되면 한반도 평화체제가 더욱 실효성 있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변 4국에 의한 한반도 평화보장 방안은 한반도에 대한 중, 미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할 수 있고, 중·미관계가 경색되었을 때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미의 이해대립을 중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일본과 러시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본은 중국을 침략한 경험이 있고 2차대전 당시 동아시아에 대한 침략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정치·군사 대국화를 기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당연히 중국에게 잠재적 안보위협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바,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진출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1991년 일본이 북한과의 수교교섭을 진행한 후 중국이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서둘렀다는 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의 보장자로 참여하는데 대해서도 중국은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러시아와 국경선문제를 대부분 타결짓고, 국경지역에서 상호 병력감축에 합의하는 한편, 핵무기 상호 불겨냥협정을 체결하는 등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하여 정치·안보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⁶²⁾ 그러나 중·러는

62) 石澤, “論新時期的中俄關係,” 『國際問題研究』, 1996年 第2期 (1996. 4), pp. 1-8; Genrikh Kireev, “Strategic Partnership and a Stable Border,” *Far Eastern Affairs*, No. 4 (December 1997), pp. 8-22; Rajan Menon, “The Strategic Convergence Between Russia and China,” *Survival*, Vol. 39, No. 2 (Summer 1997), 101-125; 孫國祥, “北京與莫斯科戰略協作伙伴關係之形成與探析,” 『中國大陸研究』, 第40卷 第3期 (1997. 8), pp. 82-97 등 참조.

여전히 긴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고, 시베리아지역 영유권문제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민족문제 등으로 언제든지 갈등관계로 변화될 소지가 있다.

또한 1960년대 부터 북한이 중·러에 대한 등거리정책을 통해 중국을 괴롭힌 바 있다는 점도 중국으로 하여금 러시아의 참여에 소극적으로 임하도록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의 보장자로 참여하게 되면, 중국은 그만큼 대북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지도자들은 러시아 지도자들과의 회담시 한반도문제를 논의해 왔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아태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원론적 입장만을 확인하는데 그쳤다.⁶³⁾ 이러한 점을 통해서도 중국이 한반도 평화문제 논의과정에서 러시아의 참여에 소극적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라. 유엔에 의한 보장방안

유엔은 한국전에 참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전협정의 조인 당사자이기도 하다. 또한 한반도에는 아직도 유엔사 소속 미군 장성이 파견되어 있다. 유엔사는 아직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는 기능을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냉전체제 붕괴이후 미국이 세계문제를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동맹국과의 협력이나 다자기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함에 따라, 세계평화 유지에 대한 유엔의 역할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⁶⁴⁾ 최근에도

63) <http://www.insidechina.com/china/news/04.html>, April 24, 1998.

64) Wang Baoliu, "UN Faces Arduous Task," *Beijing Review*, July 31-August 6, 1995, p. 18.

유엔 평화유지군은 캄보디아사태, 보스니아사태 및 아이티사태 해결 과정에 적극 개입하여 평화를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 물론 1995년으로 창설 50주년을 넘긴 유엔은 안보리 개혁문제와 재정문제로 아직도 충분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지만,⁶⁵⁾ 세계질서의 다극화 추세와 마약, 테러, 환경, 난민문제 등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의 출현으로 세계평화 유지를 위한 유엔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보장의 한 방안으로서 유엔 평화유지군의 한반도 파병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방안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국제무대에서 미국이나 소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처해 있었던 중국은 과거 유엔 평화유지 활동을 초강대국이 약소국가의 내정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 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해 왔는 바,⁶⁶⁾ 한반도 평화를 유엔에 의해 보장하도록 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패권국인 미국이 한반도 평화문제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게 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은 아직도 유엔사에 장성을 파견하여 유엔사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평화유지군이 미국의 지배하에서 기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평화문제가 유엔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을 달갑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중국의 자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문제를 유엔

65) Ingvar Carlsson, "The U.N. at 50: A Time to Reform," *Foreign Policy*, No. 100 (Fall 1995), pp. 3-31.

66) Samuel Kim, *China, the United Nations, and the Worl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p. 218; M. Taylor Fravel, "China's Attitude Toward U.N. Peacekeeping Operations Since 1989," *Asian Survey*, Vol. XXXVI, No. 11 (November 1996), p. 1104. 최근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해서 중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王杏芳 主編, 「中國與聯合國」(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5), pp. 66-88 참조.

안보리에 상정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잘 나타난 바 있다.⁶⁷⁾ 중국은 일본과 서방측이 주도하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문제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정식으로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반대하였다. 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⁶⁸⁾

중국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에도 불참하고 있는 바, 이 점을 통해서도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의한 한반도문제 해결을 바라지 않는 중국의 입장이 드러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KEDO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미국의 발언권을 더욱 확대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⁶⁹⁾ 즉, 중국은 대북 경제지원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제공하는 것 보다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유리하다고 평가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이 한반도문제를 유엔에 상정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반도문제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약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97년

67) 북한은 「광명성 1호」로 명명된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마일은 북한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劉永鎮 등 「광명성 1호」 인공위성 개발·발사과정에 참여하였던 북한 과학자들은 이 위성이 현재 우주공간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環球時報」, 1998. 10. 25, p. 1.

68) "China Gaining Ground with North Korea by Avoiding U.N. Censure," <http://www.insidechina.com/china/news/01.html>, September 10, 1998.

69) 중국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에 참여하게 될 경우 미국과 한국에 대한 북한의 협상지위가 대폭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입지를 난처하게 할 수 있는 정책선택을 피함으로써 북한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임 유엔사무총장 인선과정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⁷⁰⁾ 유엔은 여전히 미국의 주도하에 기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이 유엔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보장을 유엔에 맡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2.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입장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형성문제가 고려될 수 있다. 이는 남북한간 나아가 동북아 지역차원의 군사분쟁 예방,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군비축소 등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메카니즘이다. 「유럽안보협력회의」(CSCE/OSCE)가 유럽지역의 평화와 안보유지에 기여하는 동시에 동유럽국가들의 민주화 나아가 독일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⁷¹⁾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대립과 갈등요인들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신정부는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지역안보협력체 구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⁷²⁾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개선하고 평화상태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지역차원의 다자 안보협력체제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70)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부트로스 갈리 전임 사무총장의 연임을 지지하였으나, 미국이 갈리 사무총장을 기피함으로써 코피 아난이 신임 사무총장으로 결정되었다.

71) 여인곤, 신상진 등,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p. 114-160

72) 민족통일연구원,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추진기조」, 정책해설서 98-01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p. 77.

그런데 중국은 국제질서가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냉전 시대에는 지역 다자안보협력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미·소에 비해 역내 문제에 대해 발언권이 미약한 상황에서 다자안보협력력을 모색하는데 대해 중국은 수용하기가 어려웠다. 중국은 지역 다자안보협력체가 자국에 대한 견제·봉쇄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⁷³⁾

또한 중국은 다자적 채널을 통한 안보 보다는 양자간의 협력을 통한 안보를 더 중시하였다. 중국은 15개의 국가와 2만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국경선을 접하고 있다는 지리적 취약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과 양자차원의 선린관계를 유지·강화해야만 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따라서 중국은 접경국과의 쌍무적 안보대화와 신뢰구축 조치가 선행된 다음에야 다자안보협력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이다.⁷⁴⁾ 이와 같은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는 동북아 지역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국제질서의 다극화 추세가 진전되고 동아시아에서 ‘중국위협론’이 부각됨에 따라, 중국은 지역 다자안보협력체 형성논의에 점차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질서의 다극화·다원화 추세로 국제질서가 특정국에 의해 독단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여지가 감소하고, 다국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만 하는 새로운 문제들이 분출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게 된 것이다.⁷⁵⁾

73)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신상진, “아·태지역 다자안보 협력체제 형성에 대한 중국의 입장,” 『地域研究論叢』, 제5집 (1993), pp. 155-156 참조.

74) Yan Xuetong, “Orientation of China’s Security Strategy,”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Vol. 6, No. 2 (February 1996), p. 8.

75) 국제질서가 다극화의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중국의 관점에 대해서는 李鵬, “政府工作報告,” 『文匯報』, (香港), 1998. 3. 6; 『人民日報』, 1998. 8. 29; “沈國放析國際形勢與中國外交,” 『文匯報』, (香港), 1998. 2.

1992년 이래 '중국위협론'이 동아시아에서 설득력을 갖게 되었던 점도 중국으로 하여금 지역 다자안보협력 논의에 보다 적극성을 갖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국은 지역국간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여 지역 분쟁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자안보협력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지역 안정유지 세력이라는 점을 호소·설득하는 동시에, 다자안보협력 논의를 자국에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유도하려 하고 있다.⁷⁶⁾

중국이 지역 다자안보협력 논의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역내 신질서 구축을 미국이 주도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이다. 자국의 패권적 지위에 도전할 수 있는 신흥 강대국 출현을 저지하고자 하는 미국은 유럽지역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동유럽지역으로까지 확대하고 동아시아에서는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팩스아메리카나'를 유지시키려 하고 있다.⁷⁷⁾

미국의 이러한 전략구상은 21세기 동아시아에서 명실상부한 강대국 도약을 꿈꾸는 중국에게 위협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비롯한 5개 동맹국과 양자 안보협력을 통해 지역질서를 계속 주도해 나가려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

4 등 참고.

76) Banning Garrett and Bonnie Glaser, "China Works on Its Design for a New Asian Security Structur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ne 28-29, 1997; Kazuko Mori, "China's Pivotal Role in the Asia-Pacific Community," *Japanes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9, No. 3 (Summer 1995), pp. 231-233.

77) 미국의 세계전략은 기본적으로 '패권안정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Joseph S. Nye, Jr.,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 (New York: Basic Books, Inc., 1990); Christopher Layne, "Rethinking American Grand Strategy: Hegemony or Balance of Power in the Twenty-First Century?" *World Policy Journal*, Vol. 15, No. 2 (Summer 1998), pp. 8-28.

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 다자안보협력 논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⁷⁸⁾ 즉 중국은 참여국들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지역 다자안보협력체제는 미국의 지역 패권주의 행동을 제약하는 메카니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1993년부터 지역 다자안보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1993년부터 장쩌민 주석이 「아태경제협력체」 지도자회의에 6년 연속 직접 참석하였으며, 1994년부터서는 동남아지역을 포함한 아태지역의 신뢰구축과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아세안지역포럼」(ARF)에 계속 대표단을 파견하고 있다. 1997년 3월에는 중국이 ARF 신뢰조성회의를 직접 개최하였는데, 이는 중국정부가 주재한 최초의 다자안보협력회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⁷⁹⁾

또한 중국은 동북아 소지역 차원의 다자안보협력 논의에도 참여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는 정부관리와 민간인이 함께 참여하여 개최되고 있는 「동북아협력대화」(NEACD)가 있는데, 중국은 1993년부터 계속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고 있다.

중국은 1994년 8기 전인대 2차회의 이후 계속 지역 다자안보협력 논의에 대한 참여 필요성을 「정부공작보고」에 명기하고 있으며,⁸⁰⁾ 1998년 중국 역사상 두 번째로 공표한 국방백서에서도 아태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중시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역 다자안보협력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⁸¹⁾

78) 時永明, “亞太安全中的矛盾與合作,” 「國際問題研究」, 1997年 第3期 (1997. 7), p. 47.

79) 1996년 중국은 「동북아협력대화」(NEACD)를 주재하였는데, 이는 정부차원의 다자안보협력대화가 아니라 민간인과 정부관리가 함께 참여하는 「제2트랙」 형식의 다자회의이다.

80) 중국은 아태지역의 안보협력대화를 지지하며, 이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李鵬, “政府工作報告,” 「文匯報」(香港), 1994. 3. 11.

이와 같이 탈냉전기에 접어들면서 중국은 지역 다자안보협력체 형성문제에 대해 점차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만, 지역 다자안보협력체 형성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평등참여, 상호 존중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미국이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다자안보협력 논의가 미국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자국의 평등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태경제협력체」가 다자안보협력체로 발전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도 이러한 이유에 기인하고 있다. 즉 중국은 아태지역 경제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태경제협력체」가 다자안보협력체로 발전하게 된다면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⁸²⁾

둘째, 중국은 지역 다자안보협력 논의과정에서 평화공존 5원칙, 특히 내정불간섭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다.⁸³⁾ 중국내 인권상황과 대만문제가 중국과 서방국가간의 관계를 경색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중국은 지역 다자안보협력 논의시 인권문제와 대만문제 등 내정문제가 의제로 상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지역 다자안보협력 틀내에서도 국가주권과 지역의 다양한 특성이 존중되기를 바라고 있다.

81)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國防,” 「人民日報」, 1998. 7. 28.

82) Guo Zhenyuan, “The Main Problems Affecting the Security in Asian-Pacific & the Principles Governing the Establishment of a Security Mechanism in the Region,” *CCIS International Review*, No. 1 (August 1994), pp. 48-55.

83) 閻學通, “亞太地區安全形勢,” 「世界知識」, 1997年 第19期 (1997. 10), pp. 4-5; 時永明, “亞太安全中的矛盾與合作,” p. 47; 「文匯報」(香港), 1997. 12. 16.

또한 중국은 지역 다자안보협력기구가 영토문제를 논의하는데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현재 중국은 동남아 지역국들과 서사군도와 남사군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데, 이들 영토문제가 지역 다자안보협력 대화에 의제로 상정될 경우, 중국의 입장이 난처하게 된다. 중국이 동남아국가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아세안지역포럼」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도 서사군도와 남사군도 영유권 문제가 동 포럼에 의제로 상정되는 것을 저지하려는데 있다. 중국은 서사군도와 남사군도 영유권 문제가 국제회의 등 다자채널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 보다 관련국간의 공동개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擱置爭議, 共同開發)을 제시하고 있다.⁸⁴⁾

셋째, 중국은 양자간 안보관계를 기초로 하여 다자안보협력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많은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에서 주도권 확보를 둘러싸고 미, 일과 경쟁을 전개하고 있는 바, 우선 이들 국가들과의 양자간 안보신뢰를 조성한 다음 지역적 차원의 다자안보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지역문제의 국제화를 반대하면서 2국간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양자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⁸⁵⁾

그렇지만 중국은 양자간 안보동맹과 다자간 안보대화가 서로 양립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양자간 군사동맹은 제3국을 겨냥한 냉전시대의 잔재이므로 지역 다자안보협력체 내에서 용인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지역 다자안보협력에 참여국

84)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신상진, “中國의 대동남아정책,” 「중국연구」, 제14집 (1995. 12), pp. 161-166 참조.

85) Guo Zhenyuan, “The Main Problems Affecting the Security in Asian-Pacific & the Principles Governing the Establishment of a Security Mechanism in the Region,” p. 53.

간의 정치적 대화와 군사정책의 투명성 증대 등 주로 비군사적 수단을 통해 지역국간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분쟁발발을 사전 예방하는데 주목적을 두어야 하며, 제3국을 견제·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⁸⁶⁾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1995년 이래 미국이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5개 동맹국과 동맹관계를 심화하여 지역질서를 주도하려 한 후부터 강화되고 있다.

넷째, 중국은 지역 다자안보협력체가 특정국의 참여를 반대하는 배타적인 형태로 운영되어서도 안되며, 구속력을 가진 포괄적 안보기구로 발전되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 다자안보협력체는 모든 주권국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성원국의 일치된 합의를 통해 안보협력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⁸⁷⁾ 다만, 중국은 대만과 홍콩은 중국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이 국가자격으로 지역 다자안보협력체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데에는 반대하고 있다.⁸⁸⁾

또한 중국은 지역 다자안보협력체가 구속력을 가진 안보협력 기구로 발전되는 데에도 부정적이다.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도 아태지역에서 「유럽안보협력기구」(CSCE/OSCE)와 같은 형태의 포괄적인 지역 다자안보협력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⁸⁹⁾ 또한 중국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최고 권한을 행사하는 「당중앙외사영도소조」 조장인 리펑도 나카소네 前 일본 총리가 제의한 「동북아 4대국 평화회의」 개최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86) 時永明, “亞太安全環境與地區多變主義,” 「國際問題研究」, 1996年 第1期 (1996. 1), pp. 46-47.

87) 時永明, “亞太安全環境與地區多變主義,” p. 46.

88) 대만과 홍콩은 중국의 반대에 부딪혀 「아세안지역 포럼」과 「동북아협력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Guo Zhenyuan, “Asian-Pacific Region Remains Peaceful,” *Beijing Review*, February 5-11, 1996, pp. 9-10.

89) 江澤民, “中日關係和國內外大事,” 「人民日報」, 1993. 8. 9.

분명히 하였다.⁹⁰⁾ 중국은 아·태지역이 지닌 다양성을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내 인권문제와 대만문제 등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미국에 의한 주도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중국은 지역 다자안보협력체가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구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⁹¹⁾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는 냉전적 요소가 상당부분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자간 신뢰구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민간차원의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은 다음 정부레벨의 지역 다자안보협력 대화는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이 「동북아협력대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도 동 대화가 구속력을 갖지 않고 있고 「제2트랙」 방식(민간과 정부관료가 함께 참여)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구속력을 가진 지역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미·일에 의해서 주도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⁹²⁾ 중국은 지역 다자안보협력체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협력체 형성 과정이 자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증강될수록 중국은 지역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에 보다 적극성을 보일 전망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볼 때, 중국은 동북아를 포함한 지역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에 대해 아직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질서의 다극화 진전과 중국의 국력증강으로 지역 다자안보협력 논

90) 「文匯報」(香港), 1997. 11. 14.

91) 「人民日報」, 1994. 7. 24.

92) 高木誠一郎, “中國とアジア太平洋の多國間安全保障協力,” 「國際問題」, No. 442 (1997. 1), pp. 62, 67; Kazuko Mori, “China’s Pivotal Role in the Asia-Pacific Community,” p. 233.

의에는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변화시키고 있다. 동북아에서 중국의 위상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은 한반도 평화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지역 다자안보협력체를 구축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이를 공개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내심으로는 이러한 제의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일본과 러시아의 한반도문제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될 수 있다는 점과 미국에 의한 주도 가능성 및 궁극적으로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현 단계에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중국으로 하여금 동 구상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하도록 하는데 일정부분 영향을 줄 것이다.

V.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대중정책 방향

중국은 한반도와 긴 국경선을 접경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정치·경제·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북한의 동맹국이다. 또한 중국은 1950년 한국전에 인민해방군을 파병하였으며, 정전협정 체결과정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행사한 바 있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도 일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해 왔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중국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중국의 지지와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적실성 있는 정책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현재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남북한과 미, 중 4자회담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바, 특히 4자회담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중국의 협력과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한국의 대중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한·중 동반자관계 구축 강구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한반도문제의 국제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문제의 해결은 남북한이 주도해야 하지만, 주변국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중·북 군사동맹관계를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중국의 협조가 절실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6년전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한·중은 정치·안보적 차원에서도 사안에 따라 협조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한·중관계는 아직까지 경제·문화 등 비정치적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발전되어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는 정치·안보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협력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유지를 위해 나름대로 역할을 다해왔으며, 한국은 중국의 「아태경제협력체」 가입에 협력하고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중국의 입장을 배려함으로써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해 왔다.⁹³⁾

또한 한·중은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쌍무차원의 안보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군 고위지도자 교환방문을 추진하여, 현재는 국방차관급 교환방문 수준까지 군인사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1998년에는 중·북한간 최고위급 군사교류가 국방부 부부장급에 그친 가운데 송광카이(熊光楷)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한국을 방문하였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⁹⁴⁾ 앞으로 한국은 군인사 접촉 수준을 국방장관급으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군인사 교류를 제도화·정례화하는 방향으로 쌍무 안보협력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중국군 지도부와의 군사교류는 한국과 중국군 지도부간 선린우호관계를 구축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와 긴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군사 강대국이며 북한과도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한·중간 안보적 신뢰를 한단계 더 증진시켜야 한다. 19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 방중시 장쩌민 주석과의 합의에 따라, 한국은 중국과의 단순한 선린우호관계를 ‘21세기를 지향한 동반자관계’

93) 중국은 1991년 11월 「아태경제협력체」 회의를 주재하였는데, 여기에서 중국의 가입을 위해 적극 협력하였다. 또한 한국은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제네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중국인권 결의안 채택을 논의하였는데, 한국은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기권하였다.

94) 중국은 아직도 북한과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1998년 북한을 방문한 중국군 고위지도자로서는 송광카이(熊光楷) 부총참모장(8월)과 두티예환(杜鐵環) 北京軍區 정치위원(10월)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중국은 군사분야에서도 남북한에 대해 균형정책을 유지했다고 할 수 있다.

로 발전시켜야 한다.⁹⁵⁾ 중국과의 관계를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군사적 신뢰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한·중은 각기 미국과 북한과 유지하고 있는 군사동맹조약이 상대방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신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을 탈냉전시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보완하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한국은 중국에게 중·북 군사동맹조약 제2조 개폐를 신중하게 요청해야 할 것이다.

2. 남북한 주도의 평화체제 구축 지지 요청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교차하고 있는 지정학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해 해양세력과 대륙세력들이 각축을 전개하였던 역사적 사실들이 무수히 있었으며, 1950년 한국전도 궁극적으로는 미국으로 대표되는 해양세력과 소련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대륙세력이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해 대립하는 과정에서 발발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탈냉전의 동북아 국제질서 하에서도 미, 일, 중, 러 4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들 주변 4국은 한반도에서 갑작스러운 현상변화는 곧 자국에게 안보적·경제적 부담 증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한반도 분단의 안정적인 관리를 바라고 있다. 나아가 주변 4국 모두가 한반도 평화문제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자국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하고 있다. 한반도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마·일 자본이 투자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주변 4국의 안보이익이 달려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

95) 한국과 중국은 양국관계를 '21세기의 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동아일보」, 1994. 11. 14; 「人民日報」, 1998. 11. 14.

축과정에서 주변 4국이 일정 부분 역할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될 수 있다.

북한 역시 공개적으로는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를 반대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원칙적으로 미·북 양자협상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은 4자회담에는 형식적으로 임하면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한국과는 이미 불가침합의서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미국과만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한국이 정전협정의 법적 당사자가 아니라면서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반대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논의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국민의 정부」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미 등 주변국의 참여와 역할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성실한 합의와 진정한 이행의지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이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여하더라도 남북한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무력수단을 통해 체제를 전복하려 한다면 한반도에서 분쟁종식을 기약하기는 어렵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남북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채 주변국에 의해 주도될 경우, 남북한이 이를 존중하게 될지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 주도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은 공개적으로는 내정불간섭 원칙을 주장하면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일차적 당사자는 남북한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가 남북한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의 주도 가능성을 견제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자국의 이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평화체제가 구축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중국이 한반도 평화문제 논의를 위한 4자회담에 참여하여 긍정적으로 역할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중국의 평등한 참여가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분단국으로서 명분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남북한이 주도해야 한다는 데 반대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다.⁹⁶⁾ 중국은 대만문제를 미, 일 등 외세의 간섭없이 해결하려 하고 있는 바, 한반도 평화체제가 남북한 당사자에 의해서 주도되어야 한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한국은 평화체제를 남북한 주도하에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중국측에 적극 강조함으로써 중국의 이해와 협조를 유도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한·중 양국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주지시킴으로써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국측에 지지와 협조를 계속 요청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중국을 비롯한

96) 중국은 1998년에 들어 대만에 대한 평화통일 공세를 적극화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대만의 반관반민 성격의 「海基會」 회장과 접촉하였으며, 대만의 리덩후이(李登輝) 총통에게 장쩌민 주석과의 통일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 일본, 러시아에게 「三不政策」(대만독립 반대, 두 개의 중국 반대,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반대)지지 입장을 요구·관철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중국이 중국 통일문제에 대한 미, 일의 간섭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주변국이 남북한의 합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참여하여 역할을 행사하는 데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환기시켜야 할 것이다. 미국 역시 한반도 평화체제를 남북한이 주도해야 한다는 점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를 지지하게 될 경우, 북한도 더 이상 미·북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고집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3. 4자회담 틀내에서 한중 협력 모색

한반도 평화문제 논의를 위한 4자회담은 남북한과 미, 중 4개국의 평등한 참여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역시 한반도 평화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과 마찬가지로 4자회담에 참여하여 남북한의 입장을 중재하면서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4자회담에 참여하면서도 미국과의 양자 접촉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북한은 미·북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4자회담 지연전략을 구사하면서 대미 접촉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북한은 4자회담을 대미관계 개선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4자회담 본회담 개최시 미국과의 비공식 양자 접촉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유도하고 자신에 대한 정치·경제 제재조치 해제를 요구해 왔다.

미국도 4자회담 틀내에서 북한과 비공식 접촉을 진행하는 동시에 중국과도 사전 접촉을 시도해 왔다. 미국은 4자회담 제의 직후부터 외무장관회담과 정상회담 및 4자회담 대표간 접촉을 통해 중국과 의견조정을 모색해 왔다. 미국은 한반도문제 등 지역안정과 평화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중국의 협력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중국은 대내 경제발전과 대만문제 해결 등 주요 국가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미국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문제 논의를 위한 4자회담 틀내에서 미국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었다. 결국 미국은 중국과의 긴밀한 양자 접촉을 통해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4자회담 틀내에서 한·미, 중·미, 미·북간 양자 접촉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접촉은 4자회담 본회담에서 4자간 이견을 해소하고 합의를 도출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4자회담 제3차 본회담에서 ‘평화체제구축분과위’와 ‘긴장완화분과위’ 등 2개 분과위 구성문제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미·북간 비공식 접촉 등 4자간의 쌍무접촉 결과로 볼 수 있다. 4자회담 본회담이라는 공식회의 개최 이전에 참여국간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비공식 협의채널을 유지·가동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한국은 4자회담 구도와 남북 기본합의서 체제를 병행함으로써 남북한 주도하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국의 이러한 입장은 4자회담 틀내에서 남북간 공식, 비공식 접촉채널을 가동하여 이를 4자회담의 중요한 중심축으로 활용한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의 반대로 인하여 한국의 이러한 구상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과의 비공식 대화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한·중수교 이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⁹⁷⁾ 북한이 식량과 원유 등 막대한 전략물자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도 중국은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4자회담 틀내에서 중국과 비공식 접촉채널을 긴밀

97) 김태호, “탈냉전기 중국의 대북 영향력 동향과 전망,” 『國防論集』, 제42호 (1998년 여름), pp. 103-135.

하게 가동할 경우,⁹⁸⁾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4자회담 본회담에서 보다 현실적인 자세를 보이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은 중국과의 비공식 양자 접촉채널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중국측에 설명하고, 이에 대한 중국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중국과 비공식 채널을 가동하게 될 경우, 북한을 어느 정도 견제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대미 비공식 접촉채널 중시 전략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한국은 중국과의 쌍무 대화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반도 평화는 어디까지나 한·미동맹 축을 중심으로 하여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과 비공식 접촉채널 가동시 미국 측으로부터 충분한 사전 양해와 협조를 구함으로써 한·미 공조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 전환 유도

북한이 주한미군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적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한미군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주요 현안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북한은 4자회담 본회담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함으로써 지연전술을 구사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이끌어 내려 하고 있다. 물론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미군의 한반도 주둔 필요성이 감소되겠지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주한미군이 지역 세력균형자로서 기능하

98) 4자회담 본회담은 2~4일에 걸쳐 진행되어 왔는데, 이 기간동안 4국간 공식·비공식 접촉을 통해 상호간의 입장을 조정해 왔다. 따라서 앞으로 4자회담 본회담과 본과위원회담에서 보다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한·미, 한·중 및 남북한간 공식, 비공식 접촉과 대화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면서 일정기간 계속 잔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중국이 북한과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 미군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향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선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검토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의 인식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소련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이 존재하였을 당시 중국은 한반도 등 동아시아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군을 지역안정 유지세력으로 간주하였다. 중국은 역내 미군이 소련의 남진을 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하여, 역내 미군주둔을 용인하였다. 중국은 「이이제이」(以夷制夷) 원칙에 입각하여 최대 적대국으로 간주되었던 소련의 팽창에 대처하기 위해 덜 위협스럽게 여겼던 미국을 이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1979년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였던 것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전략적 판단에 기인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들어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와의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북방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이 대폭 감소하고 미국의 대중 견제정책이 가시화 됨에 따라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지역의 미군에 대한 중국의 인식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중국은 역내 미군을 지역안정 유지세력으로서 보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세력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역내질서가 대체적으로 안정과 평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군대가 동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중국은 원칙적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미군이 철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게 되었다. 특히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에는 미군이 중국과 직접 대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한반도에 더 이상 주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지역 안정과 중국의 안보이익에 반하는 것으로만 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⁹⁹⁾ 중국이 당분간 한반도에 미군주둔을 용인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중국은 주한 미군이 한반도 남북한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반도정세가 동아시아 지역정세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미군이 남북한간 무력대결 발발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일성 사망이후 북한 최고지도자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 중국은 경제·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린 북한이 모험행위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해 왔는 바,¹⁰⁰⁾ 주한미군이 남북한간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국은 대미관계를 고려하여 한반도내 미군철수를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미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보다 자유로운 활동영역을 확보하고 대내 경제건설에 전력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바, 한반도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과 전략핵무기 상호불겨냥에 합의하여 '건설적 전략 동반자관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군사교류·협

99)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의 한반도문제 전문가와의 인터뷰, 北京, 1998. 9. 23.

100) 덩샤오핑은 김일성과의 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의 (대남) 전쟁도발을 원하지 않는다는 강조하고, 개혁·개방을 촉구하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동아일보」, 1998. 12. 7.

력을 확대함으로써 안보적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바, 이 점도 역시 중국으로 하여금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용인하도록 하는데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국은 주일미군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도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아시아의 안보를 독자적으로 보장하기 보다는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유지해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바, 주한미군의 철수는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금세기초 일본의 침략을 경험한 중국은 21세기 중국의 안보에 일본이 미국 보다 더 위협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¹⁰¹⁾ 주한미군이 주일미군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는 역량으로 기능하기 바라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중국은 주한미군이 중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미치지 않는한 즉각적인 철수를 주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의 자세는 대체적으로 중·미관계와 일본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중·미관계가 개선되고 일본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이 가시화될수록 중국은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하게 될 것이나, 중·미관계가 악화되고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중국의 위협인식이 낮을수록 중국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요컨대, 중국은 주한미군이 원칙적으로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하고 일본이 군사력 증강 움직

101) 1993년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중앙군사위원회 판공청은 국제정세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는데, 여기에서 중국의 전략가들은 2020년 일본이 중국의 최대 적대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宗藍海, “中共議定國際頭號敵人,” 『爭鳴』, 1994年 1月號 (1994. 1), pp. 16-18.

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지역안정 유지세력으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철수는 바라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북한은 주한미군을 자신의 안보에 위협을 미치는 세력으로 간주하여 미군철수 주장을 철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4자회담 등 한반도 평화문제 논의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지위문제가 계속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과 군사동맹조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체제안보를 위해 군사지원 등 각종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북한은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협력하여 주한미군이 중국과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세력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측에 설득·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중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묵인하게 될 경우, 북한의 태도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¹⁰²⁾

중국으로 하여금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반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고 한반도 등 지역안정 유지세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미는 한반도내 공동 군사훈련에 북한군 뿐만 아니라 중국군의 참관을 허용하고, 나아가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중국군의 참관을 통해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의 위협인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미는

102) 1970년대말 중국과 북한관계가 경색되게 된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주한미군에 대한 양국의 견해차이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978년 5월 화궈펑(華國鋒)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였을 당시 중국과 북한은 주한미군의 즉각적인 철수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북한은 미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주장한 반면, 중국은 주한미군이 소련의 남진저지 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미군철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화궈펑은 평양시 군중대회 연설에서도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하등의 언급도 하지 않았다. “華國鋒主席在平壤市的群眾大會上的講話,” 劉金質, 楊淮生 主編,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獻匯編」, 5卷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pp. 2215-2219.

주한미군의 활동범위가 한반도 이남에 국한될 것이라는 점을 주시시키고, 대만해협이나 중국 변경지역 부근까지는 주한미군이 작전범위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5. 지역 다자안보협력체 형성 지지 촉구

한반도는 유럽의 발칸반도와 더불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교차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합의 뿐만 아니라 지역차원의 보장체제가 필요하다. 마·소 냉전체제 붕괴이후에도 동아시아지역에서 냉전의 잔재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는 유럽과 달리 다자안보협력체가 부재하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는 바,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유럽안보협력회의」가 유럽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면서 독일의 평화통일에도 일정 부분 공헌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동북아 지역차원의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¹⁰³⁾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우선 남북한을 포함한 지역국간의 분쟁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국의 군사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사·안보적 신뢰를 증진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져야 한다. 동북아지역을 비핵지대화하고,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 폐기·감축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동북아지역의 강대국인 중국의 소극적 자세와 북한의 반대

103) 동북아평화체제 조성방안에 대해서는 여인곤, 신상진, 김영춘 등,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p. 177-194 참조.

가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체를 형성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IV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지역 다자안보협력대화에 점차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자국에 대한 주변국의 위협인식을 불식시키고 지역국과의 양자 동맹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역 다자안보협력대화를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¹⁰⁴⁾ 따라서 중국은 「아세안지역포럼」, 「동북아협력대화」 및 「아태안보협력이사회」 등 지역 다자안보협력대화에 적극 참여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지역 다자안보협력체를 형성하는 데에는 아직도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우선 지역국간 양자적 안보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럽안보협력회의」와 같은 구속력을 가진 포괄적인 지역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에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 다자안보협력체가 미국 주도하에 작동함으로써 중국견제 장치로써 기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다자안보협력대화가 인권문제와 영토문제 등 내정문제를 논의하는 장소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이 중국이 지역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에 소극적인 바, 한국은 중국의 정책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한국은 지역 다자안보협력체가 처음부터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기구로 운용되기 보다는 협의체 형식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104) 1996년 이래 중국은 제3국을 겨냥하기 위한 양자동맹은 냉전시기의 안보관에 입각한 것이라면서 탈냉전시기에는 '협력안보(合作安全)'가 새로운 안보 개념으로 부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卍金伏, 方華, "1998年國際形勢展望," 「現代國際關係」, 1998年 第1期 (1998. 1), pp. 25-27; 俞遂, "世界格局與大國關係若干問題探討," 「現代國際關係」, 1998年 第2期 (1998. 2), p. 43.

위해 대만문제, 홍콩문제, 티벳문제 등 중국의 내정과 관련된 문제 논의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국은 지역 다자안보협력체가 미국 등 특정국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측면이 있는 바, 한국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가 지역국에게 평등한 참여와 권한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VI. 결론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보장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을 분석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한국의 대중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4자회담 제의 초기에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남북한간 긴장구조가 심화되고 북한이 4자회담에 참여하기로 결정한후 4자회담에 적극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바라는 중국은 4자회담에 참여하여 남북한의 입장을 증재함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되도록 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4자회담 3차 본회담에서 당초의 예상과 달리 2개의 분과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한 북한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었던 이유중의 하나도 중국이 분과위원회 구성을 지지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4자회담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자국의 입장을 구현시키려 하고 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이 남북한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지만, 중국이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주도 가능성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4자회담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남북한과 미국과 평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여 증재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있어서 남북한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중적 자세를 취해 왔다.

한반도 평화의 국제보장과 관련, 중국은 미·중 양국에 의한 한반도

평화보장 방식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중국은 현실적으로 한반도문제가 남북한간의 합의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마·중이 보장자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감소를 우려하여 일본과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 보장자로 참여하는데 부정적이다.

동북아 지역국간 '협력안보'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가 보다 공고히 유지·보장될 수 있는데, 중국은 지역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에 아직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동북아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도 지역국과의 쌍무적 군사동맹을 동북아 안보정책의 기조로 설정하고 역내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에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지역 다자안보협력력을 양자 동맹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에 소극적인 이유는 미국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중국에 대한 견제기구로 활용될 가능성과 중국인권문제와 대만문제 논의의 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의 입장을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지위문제가 계속 주요 현안으로 제기될 것이다. 그런데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中華秩序'를 구축하고자 하는 중국에게 있어서 주한미군 등 역내미군은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중국은 주한미군을 지역안정 유지세력으로 보는 측면도 있지만, 중국내 많은 전략가들은 소련붕괴이후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중의 하나가 중국을 견제하려는데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¹⁰⁵⁾

105)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 동북아문제 전문가와의 인터뷰, 北京, 1998. 9. 23; 이러한 인식은 1996년초 대만해협에서 중·미간 군사 대치국면 조성과 마·일 「신안보공동선언」 발표 이후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Banning Garrett and Bonnie Glaser, "China Works on Its Design for a New

이와 같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중국은 일부 문제에서 한국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를 한반도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면에서는 반드시 한국과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중국은 북한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변 강대국인 만큼 우리의 주도하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이해와 협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중국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제시되었다.

첫째, 한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한·중 양국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주지시킴으로써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국측에 지지와 협조를 계속 요청해야 한다. 물론 한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이 남북한의 합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시 참여하여 역할을 행사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환기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은 4자회담 진행과정에서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측과도 긴밀한 접촉채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4개국 모두가 참여하는 본회담에서 북한의 유연한 태도를 유도하는데 중국이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중국과 긴밀한 쌍무 접촉채널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 북한의 대미정책을 견제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유도하기 위한 방

Asian Security Structur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ne 28-29, 1997.

안의 하나로서 '6자회담' 구상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중국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일본과 러시아의 참여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6자회담'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4자회담 구도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6자회담' 제의를 전술적 차원에서 적절히 활용하게 될 경우, 이는 4자회담에서 중국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98년 2월 김종필 총리내정자가 장쩌민 주석에게 '6자회담' 구상을 제시한 후 개최된 4자회담 2차 본회담에서 중국이 남북한의 참여한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오부치 총리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6자회담' 필요성을 강조한 후 열린 4자회담 3차 본회담에서 중국이 2개 분과위원회 설치에 동조하였던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셋째, 주한미군이 중국전체 세력으로서가 아니라 지역안정 유지세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바, 북한의 자세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선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으로 하여금 주한미군을 보다 분명하게 용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미는 합동군사훈련에 중국군의 참관을 허용하고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등 중국과의 군사적 신뢰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중국은 한반도와 긴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 강대국이라는 점에서,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한·중관계가 진정한 동반자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특히 중국은 한·미를 겨냥한 대북 군사동맹조약을 유지하고 있는 바, 한국은 군사·안보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를 안보적 동반자관계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다자안보협

력체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분쟁 발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협력외교' 메카니즘으로써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다 공고하게 유지·보장할 수 있을 것인 바, 한국은 지역 다자안보협력체가 궁극적으로 중국의 안보이익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주시킴으로써 중국의 자세전환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관계의 특성상 한반도 평화체제를 남북한에 의해 독자적으로 구축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남북한 이외에도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협력하고 지지해야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하고 평화체제가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대중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동북아지역의 안보는 아직도 양자동맹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중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원식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민족통일연구원.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추진기조」. 정책해설서 98-01.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신상진.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여인곤, 신상진 등.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 編, 「周恩來選集」, 下卷. 北京: 人民出版社, 1980.
- 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 編. 「鄧小平文選」(一九七五 — 一九八三年). 北京: 人民出版社, 1983.
- 張建華 主編. 「中國面臨的緊要問題」. 北京: 經濟日報出版社, 1998.
- 張興杰 主編. 「跨世紀的憂患: 影響中國穩定發展的主要社會問題」. 蘭州: 蘭州大學出版社, 1998.
- 趙德水 主編. 「社會主義知識辭典」. 南京: 江蘇人民出版社, 1992.
- 王希亮. 「日本對中國東北的政治統治, 1931-1945」.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1991.
- 杜攻 主編. 「轉換中的世界格局」.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2.
- 裴堅章 主編. 「中華人民共和國外交史, 1949-1956」.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4.
- 席來旺. 「21世紀中國戰略大策劃: 外交謀略」. 北京: 紅旗出版社, 1996.

- 劉金質, 楊淮生 主編.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匯編」, 5卷.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 薛君度, 陸忠偉 主編. 「面向二十一世紀的中國周邊形勢」. 北京: 時事出版社, 1995.
- 席來旺. 「國際安全戰略」. 北京: 紅旗出版社, 1996.
- 王杏芳 主編. 「中國與聯合國」.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5.
- Fairbank, John K. 「新中國史」. 중국사연구회 역. 서울: 까치글방, 1994.
- Kim, Samuel. *China, the United Nations, and the Worl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 Nye, Jr., Joseph S.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 New York: Basic Books, Inc., 1990.

2. 논문

-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로동신문」, 1994. 11. 4.
- 김태호. “탈냉전기 중국의 대북 영향력 동향과 전망.” 「國防論集」, 제42호 (1998년 여름).
- 신상진. “중국: 조선족 친한화, 한·중 영토분쟁우려 한반도 현상유지 희망.” 「현경」, 제163호 (1995. 12).
- 신상진. “中國의 대동남아정책.” 「중국연구」, 제14집 (1995. 12).
- 신상진. “아태지역 다자안보 협력체제 형성에 대한 중국의 입장.” 「地域研究論叢」, 제5집 (1993).
- 한호석. “한(조선)반도에서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길.”
<http://www.pond.com/~cra/hanz.html>.
- 邴金伏, 方華. “1998年國際形勢展望.” 「現代國際關係」, 1998年 第1期

(1998. 1).

俞邃. “世界格局與大國關係若干問題探討.” 「現代國際關係」, 1998年 第2期 (1998. 2).

宗藍海. “中共議定國際頭號敵人.” 「爭鳴」, 1994年 1月號 (1994. 1).

時永明. “亞太安全中的矛盾與合作.” 「國際問題研究」, 1997年 第3期 (1997. 7).

賀沖. “日本從未放棄對臺野心.” 「文匯報」(香港), 1998. 6. 7.

劉江永. “美日重建冷戰後同盟.” 「世界知識」, 1996年 第9期 (1996. 5).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國防.” 「人民日報」, 1998. 7. 28.

閻學通. “亞太地區安全形勢.” 「世界知識」, 1997年 第19期 (1997. 10).

時永明. “亞太安全環境與地區多變主義.” 「國際問題研究」, 1996年 第1期 (1996. 1).

江澤民. “高舉鄧小平理論偉大旗幟,把建設有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全面推向二十一世紀在中國共產黨第十五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人民日報」, 1997. 9. 22.

“錢其琛談中韓日關係.” 「文匯報」(香港), 1993. 5. 25.

石澤. “論新時期的中俄關係.” 「國際問題研究」, 1996年 第2期 (1996. 4).

李鵬. “政府工作報告.” 「文匯報」(香港), 1998. 3. 6.

王松. “從兩個角度看李鵬訪韓意義.” 「文匯報」(香港), 1994. 11. 6.

賀凱. “開創東亞合作新篇章—9+3, 9+1會晤及其影響.” 「現代國際關係」, 1998年 第2期 (1998. 2)

曾虎. “東南亞不贊同中國威脅論.” 「瞭望」, 1997年 第7期 (1997. 4).

李福興, 秦世森. “朝鮮半島問題四方會談及其影響.” 「現代國際關係」, 1998年 第2期 (1998. 2).

袁明. “21世紀初東北亞大國關係.” 「國際問題研究」, 1996年 第4期

(1996. 10).

- 張大林. “日美同盟向何處去.” 「國際問題研究」, 1996年 第1期 (1996. 1).
- 達君. “威脅來自威脅論鼓吹者.” 「人民日報」, 1996. 10. 19.
- 何亮亮. “美圖維護西太平洋霸權.” 「文匯報」(香港), 1996. 4. 28.
- 江澤民. “中日關係和國內外大事.” 「人民日報」, 1993. 8. 9.
- 高木 誠一郎. “中國とアジア太平洋の多國間安全保障協力.” 「國際問題」, No. 442 (1997. 1)
- 陳新. “內地面對失業問題考驗.” 「文匯報」(香港), 1998. 2. 20.
- 楊宜勇. “失業問題:冷靜思考沈着應對.” 「瞭望」, 1998年 第1期 (1998. 1).
- 上官文天. “調停朝鮮半島危機各懷鬼胎.” 「鏡報」, 1996年 5月號 (1996. 5).
- 周德武. “四方會談終有期.” 「人民日報」, 1997. 8. 15.
- “沈國放析國際形勢與中國外交.” 「文匯報」(香港), 1998. 2. 4.
- 孫國祥. “北京與莫斯科戰略協作伙伴關係之形成與探析.” 「中國大陸研究」, 第40卷 第8期 (1997. 8).
- Carlsson, Ingvar. “The U.N. at 50: A Time to Reform” *Foreign Policy*, No. 100 (Fall 1995).
- Fravel, M. Taylor. “China’s Attitude Toward U.N. Peacekeeping Operations Since 1989.” *Asian Survey*, Vol. XXXVI, No. 11 (November 1996).
- Garrett, Banning and Bonnie Glaser. “China Works on Its Design for a New Asian Security Structur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ne 28-29, 1997.
- Guo, Zhenyuan. “The Main Problems Affecting the Security in Asian-Pacific & the Principles Governing the Establishment of a Security Mechanism in the Region.” *CCIS International Review*, No. 1 (August 1994).

- Guo, Zhenyuan. "Asian-Pacific Region Remains Peaceful." *Beijing Review*, February 5-11, 1996.
- Jiang, Zemin. "Let Us Work Together for a Better World." *Beijing Review*, November 6-12, 1995.
- Ji, Guoxing. "China Versus South China Sea Security." *Security Dialogue*, Vol. 29, No. 1 (March 1998).
- Kireev, Genrikh. "Strategic Partnership and a Stable Border." *Far Eastern Affairs*, No. 4 (December 1997).
- Layne, Christopher. "Rethinking American Grand Strategy: Hegemony or Balance of Power in the Twenty-First Century?" *World Policy Journal*, Vol. 15, No. 2 (Summer 1998).
- Mori, Kazuko. "China's Pivotal Role in the Asia-Pacific Community." *Japanes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9, No. 3 (Summer 1995).
- Menon, Rajan. "The Strategic Convergence Between Russia and China." *Survival*, Vol. 39, No. 2 (Summer 1997)
- Wang, Baoliu. "UN Faces Arduous Task." *Beijing Review*, July 31-August 6, 1995.
- Yan, Xuetong. "Orientation of China's Security Strategy."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Vol. 6, No. 2 (February 1996).
- Zhou, Xingbao. "China's Perspectives and Position about the Proposed Four-Party Talks." A Paper Presentation at KINU International Conference, Seoul, April 15, 1997.

3. 기타

「東亞日報」.

「朝鮮日報」.

「韓國日報」.

「人民日報」.

「文匯報」(香港).

「環球時報」.

「新華月報」.

「朝日新聞」.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

最近 發刊資料 案内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著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著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著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著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著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鄭永泰 著	6,000원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金國新 著	4,000원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余仁坤 金永椿 申相振의共著	10,000원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吳承烈 著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著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著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著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著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著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전성훈	著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著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김영운 이우영	共著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著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著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著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著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	共著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著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著	4,000원

96-26	·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헌경	著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著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著	5,500원
96-29	韓·中 安保協力方案 研究	崔春欽	著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著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著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계성호	著	7,000원
97-04	中·北關係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著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著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배, 신정상, 조한범	共著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 김수암	共著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著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著	4,500원

호호진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著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제: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著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著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著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著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著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著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著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제 정영태 著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著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著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著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著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운 著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현경 著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著	5,500원	
97-26	북한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허문영	著	7,000원	
98-01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합의	김병로 김성철	共著	6,500원	
98-04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임순희	著	4,500원	
98-05	북한 외자유치 법령의 문제점	제성호	著	6,500원	
98-06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합의	이교덕	著	4,500원	
98-07	1998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결과	최정홍 홍용표 박형중 허문영	共著	발간예정	옥태진영
98-08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홍관희	著	4,000원	
98-09	남북한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방향	박종철	著	6,000원	
98-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신상진	著	4,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의共著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 외 共著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 송정호 共著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8	최의철 송정호 共著	\$11.95
■ 연례정세보고서		
96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6~1997		6,000원
97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7~1998		5,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南北韓關係 現況 및 '97年 情勢 展望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500원
98-04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6,500원
98-05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5,5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上)	10,000원
96-02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下)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統一研究論叢,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7권 1호 (1998. 9)	10,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민족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안내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 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민족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로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전화:901-2604, 901-2559 / FAX:901-2547)

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근 무 처				
	직 위			
간 행 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전 화		F A X	
	전자메일			
전 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일반회원 () 학생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민족통일연구원의 정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80%; margin: 0 auto;"> 199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80%; margin: 0 auto;"> 신청인 (인) </div>				

- * 본 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시시오.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FAX: 901-2547)
-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 (예금주: 민족통일연구원)
- * 본 연구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 신청서 뒷면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